DAEJEON SEJONG FORUM

대전세종포럼

2023 가을
통권 제86호

일류 경제도시, 미래 전략 수도를 선도하는 지식 플랫폼

DAEJEON SEJONG KNOWLEDGE PLATFORM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DAEJEON SEJONG FORUM
대전세종포럼
2023 가을 통권 제8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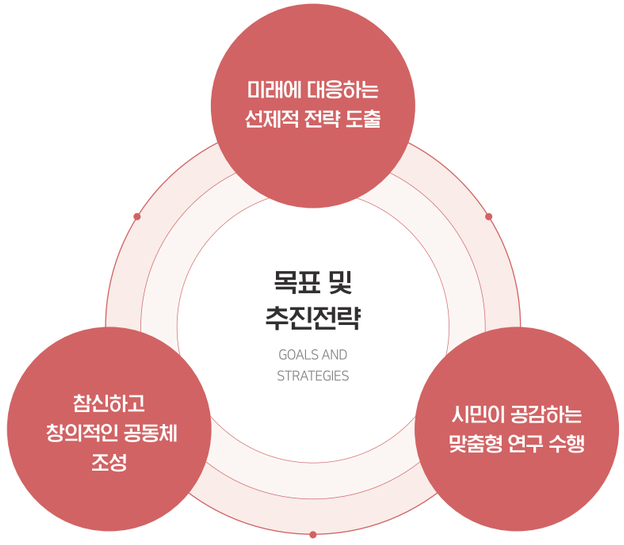
MISSION

시민 행복과 긍지를 높이는 경쟁력 있는 도시 실현

VISION

일류 경제도시, 미래 전략 수도를 선도하는 지식 플랫폼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 연구
-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의 싱크탱크
- 수요맞춤형 연구 개발



-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시스템 구축
- 소통으로 신뢰하는 조직문화 확산
-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일터 창조

- 시민 참여형 정책 네트워크 구축
- 대전 세종 상생 발전 로드맵 제시
- 최종 고객인 시민과 쌍방향 소통

Contents

대전세종포럼 / 2023 가을 통권 제86호

권두언

06 **인재를 키우는 지역만이 세계로 나아간다**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기획특집

10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0 **지역균형발전과 대전 지역의 고등교육 혁신 방안**
최병욱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32 **충북 라이즈 시범지역과 글로컬대학 지정 의미와 지역고등교육 혁신발전 과제**
정삼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42 **지역과제 해결거점으로의 일본지방대학 혁신동향**
김보람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50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교(APU) 탄생 이야기와 지역혁신**
김찬희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교(APU) 전 부총장·총장특명보좌

특별기고

62 **평생교육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과제**
임숙경 지방시대위원회 지방혁신국 전문관

지역을 읽다

76 **지역 대학의 글로컬 30선정을 위한 혁신 방향**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과 교수
채순기 배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산학협력단 단장
조현숙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LINC3.0사업단 부단장

대전·세종 FOCUS IN

88 **RISE 체계와 평생교육 학습자들의 수준 향상에 따른 지역평생교육**
박명신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교수, 대전세종평생교육사협회 회장
김미영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지역협력부장
이희정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영기획팀장

DSI NEWS

102 연구원 뉴스

권 두 언

인재를 키우는 지역만이 세계로 나아간다

김영진 / 대전세종연구원장

세대를 불문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학교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 조짐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초등학생 시절 아무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시켜도 중 · 고등학교 가면 대학입시 교육에 줄서야 하는 입장이니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터 바뀌어야 하고, 대학이 바뀌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후 취업환경이 바뀌어야 비로소 초중고 교육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천편일률적인 모범생이 아니라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방식의 변화와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지원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중심을 옮기는 라이즈 체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선진국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지역에서부터 직접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가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첨단기술이 필요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수요에 대비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학이 지역 산업과의 연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역 중심의 교육체제를 갖고 있는 선진국처럼 우리도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전세종포럼 가을호 특집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중앙과 지역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해외 지방대학 혁신사례를 살펴보고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고등교육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한 지역대학의 이야기와 지역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창의적인 융합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이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실용적인 대학으로 변화를 추구할 때 비로소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대학이 지역발전과 연계한 혁신을 이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 국가 근본지계라는 점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재를 키우는 지역만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EJEON SEJONG FORUM

논담(論談)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등교육이 가야 할 방향

기획특집

/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최병욱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 정삼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김보람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김찬회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교(APU)
전 부총장·총장특명보좌

특별기고

/ 임숙경
지방시대위원회 지방혁신국 전문관

기 획 특 집 0 1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

김병주 /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지난 7월 10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통합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동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지방시대위원회'와 그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되면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과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실효성 높은 지방시대 정책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는 대학교육, 특히 지역의 대학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은 매우 환영할 만한 것이다. 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대학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은 큰 진전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미래 전망과 고등교육의 당면 과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환경 변인들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미래 고등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다룬 주요 정책환경 변인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 산업 구조 변화, 정보통신기술 발달, 글로벌화, 융합기술 · 학문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1)]

첫째, 인구 구조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다양화로 연결된다. 저출산 현상은 대학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외국인 유학생 등의 획기적 증가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은 입학자원 부족 문제에 매우 심각하게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다만, 대학 학령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지식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재교육 훈련을 받고자 하는 성인 학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화전망을 볼 때, 제조업은 취업구조에서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IT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력구조가 지속적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학교육의 편제와 구조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셋째, 첨단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고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물리적, 기술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과 관련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네트워크 사회가 될 것이다. 이미 많은 학습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미래사회에는 더 진화되고 편리한 학습 네트워크들이 가동될 것이다.

넷째, 국가 간 상호의존과 통합,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미 국경을 넘는 교육 체제가 구축되고 있고, 국가 간 유학생의 이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다섯째, 정치·행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분권화, 지역발전 및 행정의 효율화가 진척될 것이다. 중앙의 권한이 더욱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역 발전과 행정의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지방의 역동적 발전 기반이 구축되고, 낙후지역의 자립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제고 및 구조개혁, 지역 클러스터 개발, 낙후지역 활성화 등이 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정보통신기술 혁명과 더불어 융합기술과 학문의 발전은 대학교육의 내용과 방법, 학과 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융합기술은 신 기술간, 또는 이들과 기존 산업 · 학문 간의 상승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경제와 사회 · 문화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이러한 융합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종전과 같은 전통적인 학과 구분 대신에 다학제 학과, 융복합 학과 등이 더욱 등장할 것이다.

1) 김병주 외(2011.12)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개편 방안을 바탕으로 시점에 맞게 보완함

우리 고등교육은 이러한 미래사회 전망에 부응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고등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은 녹록하지가 않다. 무엇보다 학생 수 감소와 미충원에 따른 대학재정 부족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대학의 자체 재원이 부족하고, 13년간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 미비로 인해 결과적으로 심각한 대학재정의 위기와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OECD 국가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 대비 3/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은 물론, 우리 나라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에도 크게 뒤처지는 교육비 투자로 인하여 한국의 고등교육은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양질의 기자재를 구축하며,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심각한 재정적 장애에 부딪히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교육 성과와 수준의 질적 하락으로 인해 각종 국제적 평가에서 갈수록 뒤처지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질적 경쟁력은 낮아지고 있다. 결국,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를 대학에 배분할지가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III 지방대학 육성법과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국정과제

01 지방대학육성법

2014년 1월에 제정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육성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제3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제11조(해외교류 · 연수의 기회균등),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제14조(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제5장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6장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지원의무 규정이 없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임의적 선택에 맡기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왔다.

지방대학육성법 제19조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각 시도별 조례의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지역대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육성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만 그쳐 왔던 것이 현실이다.

02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도록 중앙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나누어 주며, "분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어낸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는 지방대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내걸고, 지역과 대학 간 연계 ·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세부적으로 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지역 거점대학 육성, 대학 중심 산학협력 · 평생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서 지역대학에 대한 행 · 재정적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고자 한다.

지방대학 행 ·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경우 우려되는 바도 적지 않다. 지자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재정적 지원이 선거를 의식한 지역사회 영향력에 좌우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책임을 부여해 직접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지자체 권한이 강화되면 지역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될 것이란 부정적 시각도 있는 반면,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 중앙과 달리 지자체의 지역 살리기로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도 있다.

이러한 국정과제에 따라 지방대학에 대한 행 · 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을 토대로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책무는 오히려 적지 않다.

IV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주요 고등교육 지원 정책

교육부는 지난 3월 9일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도입을 위한 7개 시범지역(2023~2024년)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에 대해 2023년 시·도 전담부서, 라이즈센터 지정, 라이즈계획(2025~2029년) 수립 등 라이즈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시범지역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 외 10개 시·도에 대해서도 2024년 말까지 라이즈 체계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7개 시범지역으로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7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는 2025년 라이즈 도입을 위해 신청서를 바탕으로 추진체계 마련 및 라이즈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첫째, 시

범지역은 흩어져 있는 대학 관련 업무를 재정비하여 라이즈(RISE)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연내 설치하게 된다. 둘째,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선정 · 평가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라이즈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셋째,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5개년 라이즈계획(2025~2029)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7월경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한다. 넷째, 지역의 라이즈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가 있는 경우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2]을 신청하고, 교육부는 이를 검토하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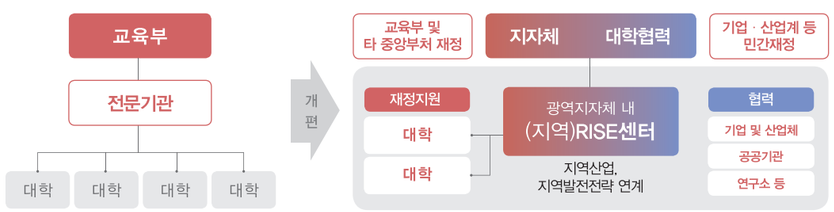
교육부는 시범지역 추진 과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담당자 대상 연수 등을 지원한다. 라이즈는 지자체가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지역혁신, 산학협력, 직업·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체계이다. 라이즈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이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역수요 반영이 필요하고 지자체 협력이 중요한 재정지원사업 연계 및 지자체 참여를 강화한다. 2025년부터 5개 사업[3]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규모를 조정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2조원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한다.

둘째, 지역주도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지정 전담기관(비영리 법인)에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배분하여 지자체 주도 계획 수립 후 대학재정을 지원한다.

셋째, 대학지원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부서 설치,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 신설을 통해 지역의 대학지원 기반을 조성한다. 2024년 기반 조성을 거쳐 2025년 전 지역 RISE 시행을 추진한다.

〈그림 2〉 라이즈(RISE) 추진 체계



자료: 교육부(2023)

2) 「지방대육성법」 제22조에 따라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특례 신청 · 적용
3)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한편, 교육부는 이미 2020년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실시하여 왔다. RIS는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9개의 RIS 플랫폼('20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21년 대전세종충남, '22년 강원, 대구경북, '23년 부산, 전북, 제주, 총 4,886억 원(국비(70%) 3,420억 원, 지방비(30%) 약 1,466억 원))이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은 ①플랫폼을 구축하여 ②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 ③'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인재양성에서부터 취 · 창업, 정주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고등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여, 공유 성장형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Ⅴ 지방시대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

지역사회에서 지방대학이 경제 및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위치는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든 공감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정원 미달 사태와 그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자칫 지역소멸로 직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을 혁신하고 지방대학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대학–지자체–산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 지역대학 지원체제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협력·지원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내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 행정적 · 재정적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권역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개입과 관여는 불가피하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 정책의 추진, 지역간 불균형의 조정과 시정, 중앙과 지방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방시대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방향은 학생의 능력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있다. 이를 위해 크게 고등교육체제 개편,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 재정지원 확대, 균형발전 유도 등을 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첫째, 지식기반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고등교육 보편화에 따른 대학교육에 대한 기대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등교육 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다. 학령인구의 감소, ICT 기술의 발전, 글로벌화, 고용시장

의 변화 등,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등교육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국가산업 및 지역발전 등 고등교육에 필요한 수요 기반 파악을 국내 자원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기업·대학의 동반발전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글로컬대학 추진 방식과 같이 대학의 자율혁신을 유도하는 재정지원사업의 추진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하게 치우친 혁신은 조심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적자원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자율성 제고 및 과학·기술분야는 물론 인문·사회분야의 기초학문 활성화가 필요하다. 평생교육의 잠재적 공급기반과 실제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자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의 개편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평가체제의 안정화 및 구조개혁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근 학생수 급감에 따른 대학의 충원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대학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학의 품질 제고를 위한 요구 증대는 여전하다. 학생수 급감에 대비하여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질 높은 대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평가체제의 안정화를 통해 살아남은 대학의 교육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되고 대학인증평가로 단일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업무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무하며, 평가참여 대학의 비용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대학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학문영역별 평가보다는 오히려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대한 재정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2014년 첫 발의되어 폐기와 재상정을 거듭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에서 한계대학의 자발적 폐교를 유도할 수 있는 법조항을 두어야 한다.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어렵다면, 초·중등학교에서와 같이 「사립학교법」에 해당 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대학에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자칫 고등교육에 대해 중앙정부가 손을 놓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과 고등교육 취학률은 모두 70%에 육박한다.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고등교육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재정투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2008년 이후 13년 동안 대학등록금이 동결 및 인하된 상황[4]에서 획기적인 국고지원 확대 이외의 대안이 없지만, 국고지원은 오히려 답보상태에 있다. 지난해 제정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1인당 GDP가 이탈리아를 추월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대학생 1인당 교육

4) 명목등록금(경상가)의 경우 2011년 대비 2020년 국 · 공립대 6.1%, 사립대 2.7% 인하되었고, 실질등록금(불변가)은 2011년 대비 2020년 국 · 공립대 15.6%, 사립대 12.6% 인하되었음

비 수준은 초 · 중등학생 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수준인데, 이는 37개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5] 하락하는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 확보 및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여기에는 중앙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고등교육법에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한 기본사항 및 대학에 대한 의무적 국가의 재정지원 명시화가 필요하다. 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다음과 같이 사립대학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포뮬러 펀딩[6]을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다양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해왔지만,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는 미흡하였다. 기관(대학본부), 교육중심(대학)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였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된 이후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업 형태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에서는 사업과 사업간 중복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사업단 위주의 다양한 재정투자 사업이 병렬적으로 지원되면서 엄격한 집행기준으로 인해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포뮬러에 의한 기관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사업단 지원사업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비의 일부를 간접경비로 대학본부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요구에 맞추어 특성화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특성화와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관련 조항은 「대학재정지원법」(안)에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평가인증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도 필요하다. 국립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규모를 확대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일정비율의 경상비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 물론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에 선행하여 사립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상비를 지원받는 사립대학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며, 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학에 지원조건(등록금 인상률, 교수당 학생 수, 학생 선발방식 등)을 제시하여 국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지원 및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5년을 기점으로 2011년 기준 14조원에 달하는 등록금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장학금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달성되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에 따라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4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매년 지출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국고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에 근거한 실질적인 학자금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대한민국의 학생당 교육비는 초등학생: $12,535, 중등학생: $14,978, 고등교육(대학생): $11,290인 반면, OECD 평균 학생당 교육비는 초등학생: $9,550, 중등학생: $11,192, 고등교육(대학생): $17,065임(OECD(2021), Education at a Glance 2021.)

6) 포뮬러 펀딩은 학생수 등 대학의 규모 및 대학이 창출한 성과 등에 근거한 지표로 구성된 재원배분 공식(formula)에 의해 대학에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대학은 몇 가지 가이드라인 내에서 배분된 재원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과거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포뮬러 펀딩에 의한 재정지원사업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넷째, 무엇보다 대학을 통한 전국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수도권의 비대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비수도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이다. 우수한 지역대학은 균형발전의 기반이 되고, 우수 지역대학이 있어야 지역의 미래가 있다. 지역대학이 양질의 교육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상생 혁신파크 또는 공유형 지역대학 플랫폼 등을 통한 지역대학 인프라의 공유로 상생과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하여 지역 한계대학의 출구 마련 및 발전적 활용 등 종합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한계대학이라 하더라도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에 대한 대학의 역할과 기여도는 과학적 지식의 생산, 기업과의 협력과 지식공유, 연구결과의 상업적 활용, 지역혁신체제, 지역의 경제적 발전 개입 등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김이수, 2016). 그동안 지역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각종 산학협력사업들은 그동안 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왔다. 대표적인 사업이 2012년부터 추진중인 LINC(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와 과거의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대학특성화사업(CK),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등이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소극적 참여와 강제적 지원 역할만을 강조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키워드로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바람직한 국정운영 방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의 발전을 주도하고 지원하도록 한 것 역시 큰 맥락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중앙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해 손을 놓는 형국이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대학은 다른 기관과는 다르다.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과 협조의 대상, 상생과 협력의 대상으로, 지역사회를 살리는 협력의 파트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주(1996).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 보조는 확대되어야 한다. 대학교육, 84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김병주(2012a). 대학재정 확보 및 지원방식의 과제와 전망.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연차학술대회). 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
- 김병주(2012b).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재정 확충방안.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 재정확충 및 투명화 방안. 2012년 4차 사학진흥포럼. 한국사학진흥재단.
- 김병주(2013). 지역대학의 현실과 육성정책 방안.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2013년 1차 사학진흥포럼. 한국사학진흥재단.
- 김병주(2015).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장학재단 정책토론회. 교육부/한국장학재단/청년위원회.
- 김병주(2019). 대학재정 확충방안. 201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세미나. 2019.6.27.
- 김병주, 구성우, 김민희, 나민주, 신재영, 이정미(2020). 대학 유형별 재정구조 및 운영 현황 분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김병주, 김민희, 박원혁, 서화정, 이정미(2019). 고등교육재정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연구. 한국연구재단.
- 김병주, 나민주, 유현숙, 이영(2007). 지자체(공공) 및 민간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방안. 재정경제부.
- 김병주, 문명현, 박원혁, 서화정(2019). 대학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고등교육정책연구소.
- 김병주, 유현숙, 백성준, 홍후조, 김정희(2011).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개편 방안.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 김성익, 김병주(2016). 사립대학교의 재정 상황의 분석과 대안 모색. 2016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김이수(2016). 메타분석을 활용한 지역과 대학간 협력에 관한 연구: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1호 2016.03 pp.115-143
- 배상훈, 김병주, 우명숙, 이교종(2014). 대학구조개혁 추진방안 연구. 교육부.

기 획 특 집 0 2

지역균형발전과 대전 지역의 고등교육 혁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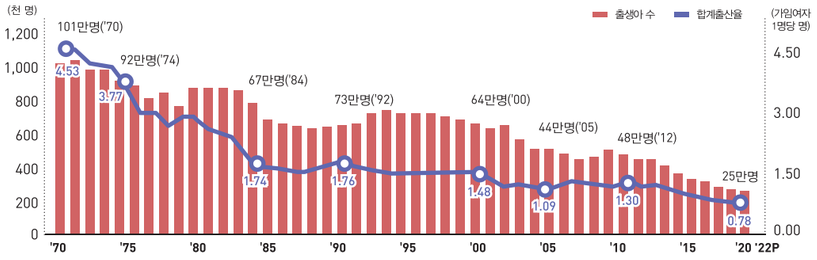
최병욱 /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Ⅰ 지역 고등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01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대학의 위기

2022년 출생아 수는 잠정적으로 24만 9천 명이고 합계출산율은 0.78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1970년대 100만 명이었던 것이 2001년 56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고, 2022년 다시 1/4로 급감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인구 급감은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학 입시에서는 2021년 처음으로 무더기 대학정원 미달 사태를 발생시켰다.

〈그림 1〉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 (1970년~2022년)[1]



2021년 대학 입시에서 전체 모집 정원의 4만 명 이상이 미충원되었으며, 이중 3만 명 이상이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했다. 2021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2002년생으로서 이들은 2001년생보다 6만여 명 적게 태어났고, 이는 대학정원 미달 사태의 주원인이 되었다. (2002년 출생아 수 496,911명, 2001년 출생아 수 559,934명).[2]

1) 자료: 통계청
2) 자료: 교육부 및 통계청

내년 2024학년도 대학입시에 응시하는 현 고3 학생들은 대부분 2005년생이며, 이들은 2002년생보다 약 6만 명 적은 438,707명으로 또다시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2017년생(출생아 수 357,771명)이 입학하는 2036년도부터는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대학이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커져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02 지역대학의 경쟁력

1) 지역대학의 교육 경쟁력

일반적으로 대학들의 우수인재 양성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육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봐야 하나, 여기서는 주로 학생 1인당 교육비,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등의 투입요소와 졸업생 취업률을 중심으로 지역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이는 〈표 1〉과 같다.

(1) 학생 1인당 교육비

대전 지역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의 설립 주체에 따라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표 1〉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KAIST는 8,600만 원이 넘지만, 국립대학들은 1,600만 원에서 1,900만 원 수준이며, 사립대학들은 1,500만 원 이하로 교육에 투입되는 재정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들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이 1,700만 원을 상회하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최상위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두 배 또는 세 배 이상임을 고려할 때 재정적인 면에서 지역대학의 교육 경쟁력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대전지역 및 수도권 일부 대학의 교육관련 지표 현황[3]

대학명	학생1인당 교육비 (원) (2021년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정원기준) (%), (2021년 기준)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학생정원기준) (2021년 기준)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 (%) (2022년 기준)	취업률(%) (2021년 기준)
충남대학교	19,155,337	93.8	21.1	62.5	62.1
한밭대학교	16,609,122	73.5	28.3	61.7	60.9
대전대학교	14,341,554	69.7	28.9	66.8	63.5
목원대학교	11,118,442	74.9	29.1	54.3	58.5
배재대학교	11,936,855	70.3	31.2	72.4	63.1
우송대학교	11,165,299	79.0	27.4	61.0	69.1
한남대학교	12,570,217	76.0	29.5	74.6	63.7
KAIST	86,200,933	99.4	20.2	79.8	68.9
서울대학교	52,866,426	137.3	13.5	50.4	71.1
연세대학교	36,215,289	114.0	17.5	51.2	71.4
고려대학교	29,628,655	103.0	20.6	53.0	70.1
전국 평균	17,084,000	-	-	-	-

3) 자료: 대학알리미

(2)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지역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KAIST와 충남대가 90% 이상이며 대부분의 대학은 70%대로 수도권의 최상위 대학들이 10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하면 낮은 값을 보인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도 많게는 30명이 넘어 전임교원의 학생 교육과 지도에 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은 전임교원 확보율과 상관관계가 적었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높아도 강의담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은 교원의 강의부담을 적게 하는 대신 연구 등 교원의 다른 역할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짐작되며,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음에도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높은 경우는 전임교원의 강의부담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3) 취업률

지역대학의 취업률은 최하 58.5%에서 69.1%로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았으나 수도권 최상위권 대학의 취업률과 비교하면 약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률 지표로 취업의 질을 판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3명 중 1명이 졸업 후 1년 이내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은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의 환경 개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2) 지역대학의 연구 경쟁력

지역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전임교원 1인당 국제논문실적,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실적, 해외특허 출원수,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KAIST를 제외하고는 연구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없는 편이다. 대학 간의 차이도 크고 일부 사립대의 경우 매우 낮은 지표값을 보여 첨단산업 중심인 지역 산업계와의 산학협력에도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표 2〉 지역대학 및 수도권 일부 대학의 연구 경쟁력 관련 지표[4)]

대학명	학생1인당 교육비 (원) (2021년 기준)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남자, 천원) (2021년 기준)	해외특허 출원수 (건) (2021년 기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백만원) (2021년 기준)
충남대학교	0.5760	155,768	49	3,158
한밭대학교	0.4660	88,576	30	563
대전대학교	0.1683	58,802	1	205
목원대학교	0.0413	8,106	0	0
배재대학교	0.1278	15,391	0	106
우송대학교	0.3735	20,876	4	16
한남대학교	0.1545	33,112	1	306
KAIST	1.1935	632,377	539	6,909
서울대학교	1.0544	296,735	598	6,953
연세대학교	0.9759	305,201	392	8,908
고려대학교	0.9006	303,077	429	4,649
전국 평균	-	100,608	-	-

4) 자료: 대학알리미

3) 지역대학의 산학협력 경쟁력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대학의 산학협력 경쟁력은 앞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산학협력 사업은 산업계와 대학의 네트워크 구축, 산업체 애로기술 문제해결, 대학생 현장실습, 산업계 수요자 기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다만, 산학연계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시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소통의 한계 등은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표 3〉 대전 지역대학의 주요 산학협력 연계 사업 참여 현황

사업명	기간	유형	참여대학	비고
1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2012-2013	기술혁신형	충남대	
		현장밀착형	우송대, 한밭대	
	2014-2016	기술혁신형	충남대	
		현장밀착형	대전대, 한밭대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2017-2021	산학협력고도화형	대전대, 충남대, 한남대, 한밭대	
		사회맞춤형 중점형	배재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LINC 3.0) 육성사업	2022-2027	기술혁신선도형	충남대	
		수요맞춤성장형	대전대, 한남대, 한밭대	
		협력기반구축형	목원대, 우송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RIS) 사업	2021-2025	미래모빌리티 혁신생태계 구축	충남대, 공주대 등 대전·세종·충남 지역 24개 대학	국비 2,400억원 지방비 1,300억원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	2019-2023	ICBT 창의·융합기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한남대	
SW중심대학	2015~	AI, SW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및 맞춤형 인재양성	충남대	
	2018~		우송대	
	2019~		배재대	
	2022~		한밭대	

4)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방향

(1) 대학특성화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수도권 쏠림현상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위기에 놓인 지역대학들은 특성화를 통해 대학의 존재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대학들의 강점과 약점 요소들을 분석하여 대규모 종합대학의 형태만 지향하기보다 대학별 강점분야 중심 재편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특성화가 기초과학 및 보호학문 분야를 소외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국립대학 중심의 육성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교육체제 구축

2021년 2월에 조사한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졸자 중 52.3%는 전공과 전혀 무관한 직업을 선택한다고 한다. 나아가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자료에 따르면 졸업 이후 미취업자 청년의 비중은 해당 연령대 대졸자 전체 중에 26.8%에 달한다고 한다. 대학 졸업자들의 미취업의 주요 원인은 진로와 전공의 불일치가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많은 대학에서 마이크로 디그리, 다중전공, 융합전공 등이 과거보다 활발하게 개설 ·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폐쇄적인 학과 중심 교육과정 운영, 전과제도의 경직성 등으로 다학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대학들은 사회와 산업변화에 부합하고 지역사회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개선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에 기여하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산업계와 지역사회는 지역대학과 함께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3) 재정지원 강화

2008년 이후 정부 정책에 의해 등록금 동결이 15년째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의 질 제고 및 대학 역할 강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지역대학들을 재정적으로 직접 지원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대학이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지역의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II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대학의 역할

인구감소와 수도권 일극 중심의 발전으로 지역소멸의 위기감이 증대되는 가운데, 다극 중심체제로의 변화만이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이제는 지방시대'를 정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대학들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지역사회 연계성 강화 등 대학의 자체적인 혁신과 지자체, 지역산업체 등 지역사회의 대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01 지산학연간 협력체계 구축

1)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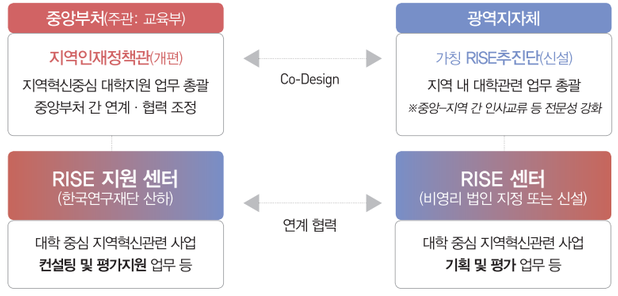
대학의 지역사회 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지자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 지역 산업체 및 사회단체 등 지산학연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대학의 인력양성에 연계된 조직으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지원협의회'와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를 두고 지역 고등교육 인재양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본 협의회의 논의가 피상적인 수준에 그쳐 대학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상호발전을 위한 논의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에는 인력양성을 전담하는 과 단위의 부서가 없고, 창업진흥과, 일자리경제과 등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부산광역시와 같은 경우는 청년산학국이라는 국 단위의 인력양성 전담부서를 두고, 하위조직인 지산학협력과에서 대학 및 산학협력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부산테크노파크에도 지산학협력단을 두고 R&D와 고등교육 인재양성을 지원하게 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지자체가 고등교육 인력양성을 책임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지자체-산업계 협업을 지원하는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센터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며(〈그림 2〉), 최근에는 〈표 4〉와 같이 7개의 지자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2〉 중앙정부가 제시한 대학지원 조직 체계(안)[5]



〈표 4〉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별 라이즈센터 지정 · 운영 예정기관

지역	담당기관	비고
경상남도	경남평생교육진흥원	(가칭)인재양성재단으로 전환 추진
경상북도	경북연구원	2025년 이후 법인 별도 설립 추진
대구광역시	대구정책연구원	2025년 이후 법인 별도 설립 추진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	
전라남도	전남인재평생교육원	
전라북도	전북테크노파크	2025년 이후 법인 별도 설립 추진
충청북도	충북연구원	

5) 자료: 교육부

RISE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광역시도와 대학이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관련 대학에 지원되는 국고 재정사업 집행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것이 골자인데, 2025년에는 전지역에 RISE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대전광역시 RISE 센터 설립

정부는 지역 내 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RISE 센터를 신설하여 대학 중심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업무 전담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지자체들은 〈표 4〉와 같이 RISE 센터를 평생교육진흥원, 지역 정책연구원, 테크노파크 등이 담당하도록 하였고 일부 지자체는 향후 별도의 법인의 설립해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들어 충청남도는 시범지역에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이와 별개로 충남 RISE센터를 충남연구원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3개팀 24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광역시도 시범사업에 선정되지는 못하였어도 지금부터 RISE 센터 구축을 서둘러 지자체 지원대학 업무를 중심으로 '대학-지자체-산업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전광역시가 RISE 센터를 구축한다면 이 조직은 대학 지원 및 산학협력 전반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따라 〈그림 3〉과 같은 RISE 센터의 구성을 제안한다.

〈그림 3〉 대전광역시 RISE센터 조직도(안)

(1) 센터장 및 운영위원회

RISE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센터장은 지역대학 및 사회를 잘 이해하고, 지자체 대학 산업계와 균형적인 사고를 갖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으로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6]'의 심의를 받아 선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에는 지역대학들이 추천하는 대학 관계자들과 대전광역시가 추천하는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센터운영 전반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다.

2) 대학지원팀

대학지원팀은 중앙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예: RIS사업, LINC3.0,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지원사업, 캠퍼스혁신파크 사업 등) 중 지자체의 매칭펀드가 포함된 경우 사업이 지자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지자체 예산으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도 대학지원팀에서 사업을 관리하도록 한다. 아울러 대학에 제공되는 재정지원사업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3) 산학협력팀

산학협력팀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와 별개로 산업계와 대학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제안한다. 지역대학들은 지역 산업체와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특히 표준형 현장실습의 경우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으로 많은 여러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RISE 센터가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어 대학이 요구하는 현장실습뿐만 아니라 산업계가 요구하는 애로기술 해결 및 수요자 중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생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바람직할 것이다.

4) 기획분석팀

기획분석팀은 산학협력과 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산업별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대학의 인력 정보, 기업의 산업유형을 데이터베이스화하거나 라이브러리로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대학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의 평가 분석은 대학지원팀이나 산학협력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더라도 전반적인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분석과 개선을 기획분석팀이 담당하여 센터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이끌도록 한다. 나아가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대학과 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도 지원하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산업계의 외국인 전문가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6) 향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시 '지역고등교육협의회'가 담당

3) 지산학연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정부의 고등교육 인력양성에 지자체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자 RISE센터를 설립 ·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지산학연 협력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더욱 포괄적인 전주기적 지역인재양성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RISE센터를 포함하면서 지자체, 대학, 산업계, 출연연 및 기타 사회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산학연관 협력 거버넌스로 〈그림 4〉와 같은 가칭 '지산학연협력추진본부' 법인 설립을 제안한다.

(1)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향후 설립이 예상되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7] 및 RISE센터에 참여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지자체, 대학, 산업계, 출연연 및 기타 사회기관의 대표 또는 기관별 대표가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하며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한다. 이사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구성원들의 추천으로 선정하며, 대학과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교육과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림 4〉 대전광역시 지산학연 협력 거버넌스 조직도(안)

7) 향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시 두게 될 조직

(2) 산하조직의 역할

① RISE 센터

지산학연협력추진본부 산하에서 RISE 센터는 중앙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 사업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재정지원, 사업관리 및 평가와 개선 기능을 담당한다. 앞서 언급한 RISE 센터의 기타 기능 및 추가된 기능은 별도의 부서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한다. 아울러 RISE센터는 산하 조직의 선임부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반적인 정책 및 사업을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성과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 산학연협력 지원부

대전에는 타 지역과 달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첨단산업기업들이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산학연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바이오, 반도체, 정보기술, 국방, 우주산업 등 특화산업 분야별로 산업별 산학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 플랫폼 중심의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의 애로기술, 연구기관과 대학의 첨단기술이 지역산업 발전에 상호 기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③ 일자리 지원부

일자리 지원부는 대학생 및 지역청년들의 원활한 지역산업체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대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안타깝게도 교육부가 요구하는 표준현장실습(산업체가 최저임금의 75% 지원을 의무화)으로 산업체들의 참여도가 낮아지는 상황이라 지자체가 나서서 대학생들과 기업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생들의 지역 산업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바람직하다.

④ 미래인재 양성 지원부

미래인재 양성 지원부는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담당한다. 이 부서는 대전교육청, 지역대학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과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의 교육수준 제고를 통해 지역정주 환경 개선이라는 부가적인 성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지역사회 상생 지원부

교통, 안전, 소상공인, 원도심 균형발전 등 지역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대학 및 출연연, 산업계 및 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으로 해결하고 상생을 추진하는 업무를 본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특히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로컬 크리에이터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면 이들의 지역정주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III 맺음말

수도권 집중과 인구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지식산업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식 창출 능력이 큰 대학과 연구기관, 신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계의 협력적인 역할 도모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양성의 기반이 되는 지역대학의 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15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 강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지역대학이 지자체, 연구기관, 산업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식산업 사회에서의 역량 강화로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과 지식창출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근 정부가 요구하는 RISE 센터 설립을 빠르게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산학연협력추진본부와 같은 거버넌스의 구축을 제안했다.

다만 RISE 센터나 지산학엽협력추진본부 등과 같은 '대학-지자체-산업계 협업체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기관들의 전문성과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지자체는 지금까지 정부재정지원사업의 매칭펀드 지원 정도에서 비교적 대학을 수동적으로 지원해왔다. 지자체가 스스로 나서서 지역의 고등교육 인재 양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본 적이 없고, 지자체에 관련 전문가도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고등교육 · 행정의 전문성을 우선 확보해야 하며, 내외부 전문가풀 구축 및 관리도 또한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 단체장에 따라 정책이 쉽게 변하지 않게 하려면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역 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역대학의 특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보다 그저 대학 간 나눠먹기가 된다면 지자체 중심 대학지원 체계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지자체를 통한 재정지원만을 기대하면서 대학혁신과 특성화에 적극적이지 못하면 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는 낮아질 것이며, 결국 대학의 지속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지역대학들은 기존의 산학협력 수준을 뛰어넘어 지산학연 협력으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 구성원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산업계 또한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산업체가 고등교육 인재양성에 중요한 한 축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대학의 인재양성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대학이 새로운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수립 · 운영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대학생 현장실습, 산업체 멘토링,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및 애로기술 해결 등을 협력적으로 수행하여, 그저 대학이 배출하는 인재를 수용하기만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도 마찬가지로 개방적인 자세로 산업계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며, 지자체도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벗어나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대학-지자체-산업계 협업체계'의 구축 · 운영이 필요하다. 그저 형식만 갖추고 기존의 관습대로 운영한다면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도 위기에 놓일 것이다. 아무쪼록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 모두가 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대전이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한다.

기 획 특 집 0 3

충북 라이즈 시범지역과 글로컬대학 지정 의미와 지역고등교육 혁신발전 과제

정삼철 /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Ⅰ 들어가기

교육부는 2023년 1월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지역맞춤형 교육개혁 차원에서 규제 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 추진을 위해 고등교육 분야의 규제혁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규제혁신 차원에서는 대학의 정원·학사·재정 운영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여 2026년까지 대학규제 제로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권한이양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교육기관 설폐 승인 등의 권한과 지방대 지원 계획수립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정부의 획일적인 평가는 폐지하고, 대학교육협의회의 인증평가 및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해 재정을 지원하고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의 추진을 위한 고등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을 추진하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특히, 지역혁신 성장의 허브 육성을 위한 라이즈(RISE)의 구축을 통해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3년에는 의지와 역량이 있는 지자체 5개 지역 내외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25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 대폭적인 규제완화 및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를 추진하고,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구로 지정해 규제특례 적용과 지역주도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협력해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지역과 동반 성장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Glocal) 대학 육성을 지원하고, 지자체에 대학지원 전담부서 등을 설치해 지역의 대학지원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가 있다.

이어 2월에는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RISE 시범지역 선정·운영계획 공식발표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에 13개 시·도에서 신청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통해서 2023년 3월에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2023년 중에 전담부서와 라이즈센터 지정, 5년간('25~'29년)의 계획 수립 등 라이즈 체계 구축을 완료한다. 2년간('23~'24년)의 시범지역 운영 성과를 기본 바탕으로 시범지역 이외에 나머지 10개 시·도들도 2024년 말까지 라이즈 체계 구축이 완료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라이즈 시범지역을 선정한 이후 4월에는 고등교육 혁신을 위하여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위원회는 라이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5월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6월쯤 우선 예비지정 대학 15개교 내외를 발표하였다. 9월 말에 본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10월에 본지정 결과에 대한 확정 발표를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예비지정 대학들은 3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지자체, 지역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사전에 제출한 혁신기획서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글로컬대학 지정은 비수도권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23년에 10개 내외를 우선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24년에 10개 내외, '25~'26년에 각각 5개 내외를 추가 지정해 '26년까지 총 30개 글로컬대학을 지정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서 6월에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접수 결과 총 108개교가 참여해 모두 94개의 혁신기획서가 제출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5개의 혁신기획서(단독 11개 공동 4개)를 선정하였고, 4개의 공동 혁신기획서는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의신청을 거쳐서 7월에 예비지정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본지정을 위한 평가에 돌입하였다. 10월 말에 본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 다음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정부(교육부)는 라이즈 체계 구축을 위한 일련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지역과 대학 혁신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고등교육 혁신 시범지역 중 한 곳으로 지정된 충북 라이즈를 중심으로 본 사업에 대한 기본취지 및 시범지역 지정의 의미와 앞으로의 혁신발전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라이즈(RISE)의 개념과 추진 배경 및 주요 정책 내용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개념은 그간 정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지원의 행 · 재정적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위임 · 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명 라이즈(RISE) 구축 정책의 추진 배경은 인구구조와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되면서 현실적으로 다가온 지역소멸

과 지방대학 존립 위기의 동시 극복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기반인 대학의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과 참여 확대를 통해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혁신적 성장과 발전에 대한 대학의 역할 강화 등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하여 '인재양성-취 · 창업-정주'에 이르는 지역사회 혁신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선순환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려는데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라이즈 구축 방안의 주요한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사업의 비전은 '지역인재양성-취 · 창업-정주'를 위한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으로,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및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 비전 체계도

자료: 교육부 인재정책실(2023.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 · 운영 계획

라이즈 구축 사업의 추진전략 방안은 첫째, 재정적 측면에서는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50% 이상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한다.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추진을 위해 정책메뉴판 제공과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 사업 가운데 지역주도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지자체가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의하며, 시 · 도 지정 전담기구에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해 지자체 주도로 계획을 수립해 대학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대학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키우는 지역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지원을 추진토록 5년 단위의 라이즈 계획수립-협약체결, 대학지원, 성과관리를 시행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30개의 글로컬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셋째, 규제개혁과 권한이양으로 대학자율 확대 및 지자체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3~'24년에는 시범지역을 운영하여 맞춤형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한편, 2023년 이후 계속해서 과감한 대학규제 개혁으로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부령 · 지침 등을 신속히 개선하고 법령 개정과 타 부처 관련 규제 등을 혁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넷째,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차원에서 지역주도의 대학지원 체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 · 도에는 대학지원 전담부서 조직을 신설하고, 별도의 전담기관을 지정 · 운영하는 한편, 지역주도의 대학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운영을 위해 시 · 도별로 지자체장, 교육감, 대학의 장, 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을 운영하고, 라이즈 전면 시행 이전에 지방대 육성법의 개정을 통해 필요한 법률적 근거와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 신설 근거 및 필요시 이와 관련하여 타법의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III 라이즈(RISE) 시범지역 선정의 의미

라이즈(RISE)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는 우선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였고, 평가 결과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역을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기존에 교육부에서 직접 주도해 오던 대학지원 사업예산의 50% 이상을 2025년부터 지역의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통한 성공모델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하기 앞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발굴·정비해 차질 없는 라이즈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의 급변에 따른 지역과 지방대학의 공동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 확

대와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통한 선순환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앙권한이 지양된 자자체 주도의 분권형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데 기본바탕을 두고 있다.

라이즈 시범지역의 지정 의미는 거시적으로 국가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예산 권한을 지자체에 절반을 이양해 줌으로써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지역대학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간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 지자체 측면에서는 그간에 지역대학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지자체가 지역대학과 따로였던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역 수요와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는 물론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에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지역 주도의 혁신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현실적 측면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몰락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방대학도 폐교 위기를 벗어나 당당한 지역의 한 주체로써 대학의 지역 밀착경영과 지역사회 참여의 능동적 주체로 거듭나 지역과 지역대학이 동반성장과 혁신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그 의미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충북은 라이즈(RISE)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미래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대학의 존립 가치와 생존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는 협력적 노력이 요구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치분권의 지방시대에 지자체는 지역발전 주도력을 상실하고, 지역대학은 지역의 핵심 주체로서 더 이상 존립 기반을 유지해 나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글로컬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충청북도와 지역대학은 이제부터 이전과 다른 인식과 각오로 충북 라이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혁신 역량을 확충하고 주도력을 제대로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충북 라이즈(RISE) 시범지역과 글로컬대학 추진 혁신계획

이에 충북 라이즈 시범지역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선 먼저 충북 라이즈 시범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가 공동으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을 위해 제출한 혁신기획서의 주요 제안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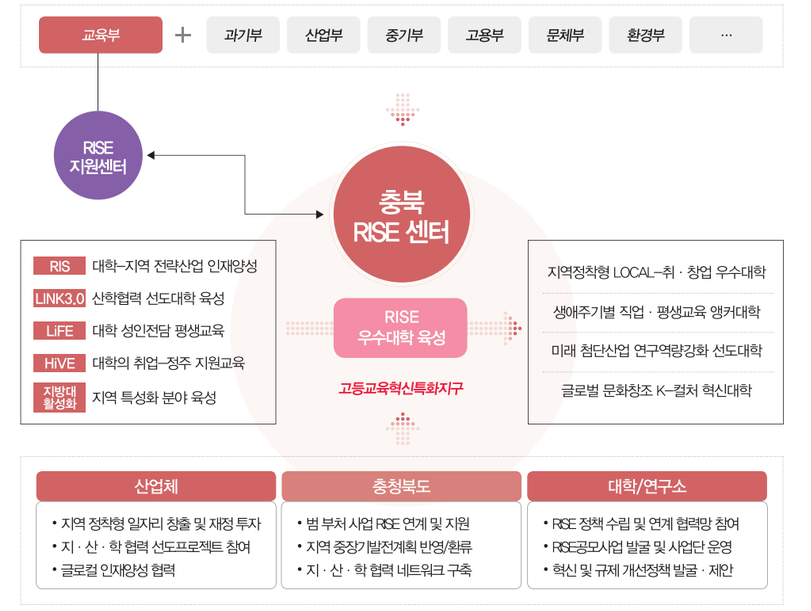
충청북도가 라이즈 시범지역 지정을 받고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핵심 내용은 첫째, 라이즈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 마련을 위해 충북도에 전담조직인 충북 RISE 추진단을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1팀 5명으로 구성된 과학인재국 청년인재육성과의 대학협력팀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시범기간 동안 지역산학협력팀, 대학혁신지원팀, 전문인력양성팀, 혁신캠퍼스조성팀 등의 4팀 18명 규모로 충북 RISE 추진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를 지원할 전담기관으로 충북연구원을 지정하고 산하에 RISE 센터를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그림 2〉 충북 RISE 추진조직 개편(안)

자료: 교육부(2023.3.8.), 2025년 RISE 도입 본격 시동-시범지역선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둘째, 충북 라이즈 체계를 통한 실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 라이즈 센터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의 재원을 활용해 충북형 대학지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형의 대학지원 프로젝트로 제안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정착형 Local 취·창업 우수대학육성, 생애주기별 직업·평생교육 앵커대학 육성, 미래첨단산업 연구역량 강화 선도대학 육성, 글로컬 문화창조 K-컬쳐 혁신대학 육성 등이다. 이에 충북도는 유관기관과 산업체 등과 함께 이와 관련한 정책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림 3〉 충북 RISE 추진조직 개편(안)



자료: 교육부(2023.3.8.), 2025년 RISE 도입 본격 시동-시범지역선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한편, 라이즈 체계 구축 핵심사업 중의 하나이자 대학혁신을 위하여 추진되는 글로컬대학 지정에서 1차 관문을 통과하여 예비지정이 확정된 충북지역 소재의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가 공동으로 제출한 혁신기획서의 주요 혁신정책 제안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예비지정을 통과한 충북 글로컬대학의 혁신비전은 '통합을 통한 혁신동력 극대화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로 정하고, 세계최고 수준으로의 대학발전을 통한 지역 성장과 혁신을 견인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 혁신목표로 캠퍼스 특성화를 통한 4대 분야[1] 혁신 선도 인재 연간 1천 명 양성, 지역산학연계 취·창업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정주 졸업생 40% 실현, QS[2] 세계대학 100위권 진입·첨단 & 기초분야 10개, 학문분야별 순위 50위권 진입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혁신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충북 산학협력 허브 역할, 대학 내외부 경계 허물기,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혁신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등의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고 총 12개의 세부 혁신과제[3]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림 4〉 충북 글로컬대학 혁신비전 전략도

비전

통합을 통한 혁신 동력 극대화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

세계최고 수준으로의 대학 발전을 통한 지역 성장과 혁신 견인

목표

캠퍼스 특성화를 통한 4대 분야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혁신 선도 인재 연간 1,000명 양성	지산학연 연계 취·창업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정주 졸업생 40%	QS세계대학 100위권 진입, 첨단&기초분야 10개 학문분야별 순위 50위권 진입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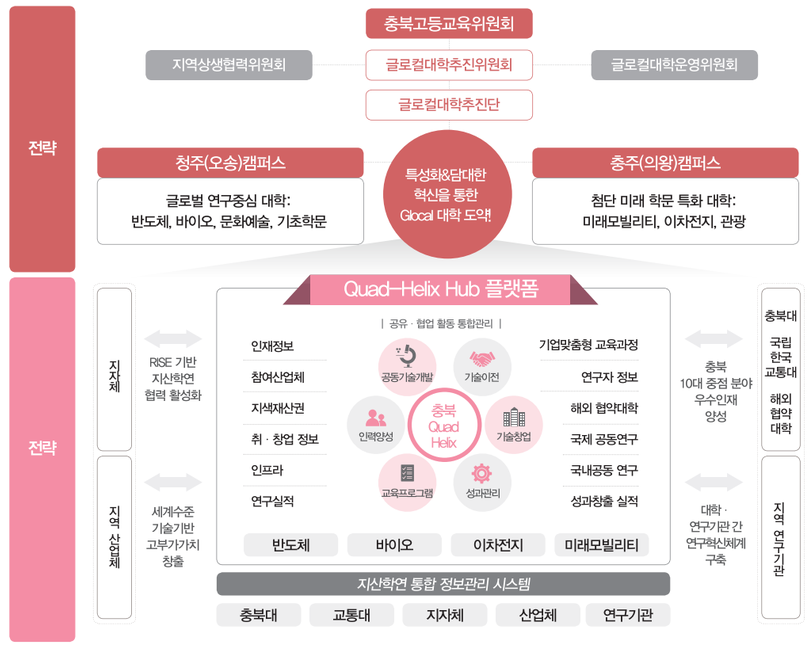
P1 충북산학협력 허브 역할	P2 대학 내외부 경계 허물기	P3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P3 혁신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 지역 산업 중심 캠퍼스 특성화 • 대학과 지역연구기관 간 연합체계 구축 • 신산업창출 창업·창직 대학 • 지산학연 연계 생태계 구축 – Open&Shared Campus 구축	• 양 대학의 유기적 통합: 유사학과의 화학적 결합 • 학생중심의 학사구조, 제도 혁신 • 교원인사제도 혁신: JA제도화 • 경계를 허무는 커리큘럼 혁신	• 첨단 및 기초과학 분야 글로벌 교육, 연구 경쟁력 확보 • 글로벌K-교육모델 혁신: – K-고등교육시스템 수출모델개발 – K-culture 융합대학 운영 • 글로벌학·석사 연계과정 도입	• Quad-Helix Hub구축: 지산학연 연계협력 생태계구축을 위한 플랫폼 구축 • 대학 거버넌스 개방 • 성과중심 인사 혁신 • 데이터기반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자료: 충북대학교 · 한국교통대학교(2023.5),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신청서

1) 4대 분야는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를 말함.
2) Quad-Helix Hub 플랫폼을 의미하는 대학혁신 모델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임.
3) 전략별 12대 혁신과제는 ① 충북산학협력 허브 역할 부문에 4개(충북 10대 중점산업 중심 캠퍼스 특성화, 대학과 유관 연구기관 간 연합체계 구축, 신산업 창출 창업·창직대학, 지·산·학·연 연계 협력 생태계 구축) 과제, ② 대학 내·외부 경계 허물기 부문에 3개(대학 통합 추진, 학생중심 학사구조·제도개선, 경계를 허무는 커리큘럼 혁신) 과제, ③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부문에 3개(제서 글로벌 교육·연구 경쟁력 확보, 글로벌 K-교육모델 혁신, 경계를 허무는 글로벌 혁신) 과제, ④ 혁신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부문에 2개(대학 거버넌스 개방 및 추진체계 구축, 자율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과제 등임.

한편, 이와 같은 충북 글로컬대학 혁신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지역산업체, 충북대·한국교통대·해외협약대학, 지역연구기관 등이 공동참여하는 통합형 글로벌 생태계의 Quad-Helix Hub 플랫폼 체계를 구축하고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와 함께 글로컬대학추진단과 글로컬대학추진위원회, 충북고등교육위원회 등을 구성 · 운영하여 충북 라이즈 사업과 연계한 상생협력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림 5〉 충북 글로컬대학 혁신추진 체계도



전략

강점(Strenngth)

- P1 충북 기업 기술 이전의 84% 충북대 및 교통대 실적임
- P2 무전공 지원자 증가 및 입학경쟁률 향상
- P3 충북 4대 핵심분야와 충북대-한국교통대 전공적합도가 높음
- P4 지역혁신 및 발전을 위한 대학간 고도화된 공유 · 협력 체계 구축

약점(Weakness)

- P1 충북의 산업기술인력 미충원 심각&청년층 수도권 유출 심각
- P2 융 · 복합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체제 혁신 필요
- P3 타 국립대학 평균 대비 미흡한 전임교원 1인당 국제연구 실정
- P4 혁신을 가로막는 경직된 국립대학체제(법령상 제약 다수)

기회(Opportunity)

- P1 충북 4대 핵심분야 전략산업 산업현장 인력 수요 증가
- P2 다목적방사광가속기완공 대비('27년) R&D융합전공 운영 필요
- P3 충북 4대 핵심분야 인력수요 증가 및 해외 기업 투자 증대
- P4 지산학연 협력 기반 확보(RIS사업 3년연속 A등급)

위협(Threat)

- P1 최근 10년 간 충북 순유출 청년인구 27,151명
- P2 효과적 지역 중점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학사구조혁신에 대한 강력한 저항 발생
- P3 전방위적인 산업육성 촉진을 위한 연구비 부족
- P4 지산학연 연계협력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및 플랫폼 부재

자료: 충북대학교 · 한국교통대학교(2023.5),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신청서

따라서 이상에서와 같은 충북 RISE 시범사업과 충북지역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클로컬대학 혁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충북지역과 지역대학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 당면한 지역과 대학의 현안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여 지방시대에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충북의 주도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Ⅳ 충북 혁신발전 및 충북 고등교육 혁신발전 과제

지역대학이 충북혁신 발전의 핵심 기반이자 견인차로 거듭나고, 충북도가 지역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자체와 지역대학은 어떠한 전략적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며, 어떠한 혁신과제의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성찰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충북 라이즈 전담조직과 인력확보를 통한 적절한 추진 기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계획상으로 충북의 라이즈 전담조직은 4팀 18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지정지역들과 비교하면 경남, 경북, 부산, 전북보다는 작은 규모이고, 대구, 전남보다는 큰 규모이다. 따라서 충북도는 충북 RISE 시범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역량 있는 조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산업과 지역대학의 현장 접목과 혁신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충북 라이즈 전략계획('25~'29년)의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라이즈 사업의 추진을 위한 충북 라이즈 전략계획 수립의 사전적 대비 차원에서 현실적인 지역 현장 수요의 철저한 파악과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성과가 기대되고, 지역접목이 가능한 충북 밀착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충북 특화형 대학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충북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내 모든 지역대학이 참여해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대학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충북지역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자칫 편향된 대학지원은 실질적인 혁신성과 창출과 지원이 특정 지역과 대학에만 너무 집중되어 지역 간 격차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프로젝트의 합리적 조정과 적절한 정책적 선택 및 균형적 지원에 대한 맞춤형 안배가 필요하다.

넷째,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는 충북 글로컬대학 본지정에 대비해 제출할 혁신기획서의 사업내용과 논리를 보다 탄탄하고 설득력 있게 수립하여 본지정에서도 아무런 지장 없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충북 글로컬대학은 아직은 예비지정 단계에 있는 상황이므로, 10월 시행예정인 정부 차원의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충분한 공동협력 대응으로 경쟁력과 차별성이 있는 글로컬대학 혁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대학들도 이론적 단계의 지식교육과 단순한 인재 양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용적 단계의 전문교육과 현장 맞춤형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선도기관으로 거듭나는 자발적 대학혁신 경영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메가트렌드의 사회 · 경제적 환경에 직면해 있음에도 별다른 여건 변화의 수용과 반영이 미약하고, 정작 현장 직접 투입이 어려운 단순 인력만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감한 대학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지역대학들도 이제는 과거처럼 단순히 대학의 강단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교육과 연구, 보편적 인재 양성의 단계를 뛰어넘어 지역사회의 혁신과 산업현장 등에서 활발한 쓰임이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프로젝트의 발굴 연구와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 주도기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로컬전문 지역인재의 적극적인 확충과 유치 및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 원활한 소통 · 협력이 가능한 산학협력시스템 채널의 상시화를 위한 협력적 로컬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 라이즈 혁신사업과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의 성공적인 추진과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주체이자 경쟁 기반으로 로컬전문형 인재 확보와 원활한 소통 채널과 효율적인 지역 산학협력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퇴직 이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로컬전문 연구교수와 지역전문가들이 계속 지역에 정주하며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 발전 및 사회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선순환의 로컬메커니즘 구축과 기회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래도록 지역대학이나 충북 산하 연구기관 등에서 지역 혁신정책사업 발굴 연구와 경험 · 지식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는 귀한 지역의 인적자원이고, 여전히 일할 의사가 강하지만 정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은퇴하는 로컬전문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충북도와 시 · 군, 지역대학 등에서는 지역 인적 자원 확보 차원에서 이들을 적극 영입하고 활용해 지역발전혁신사업 기획과 지역대학의 특성화 발전 및 혁신경영을 계속 도모해 나가려는 능동적이고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3.1.5.),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 별첨.
- 교육부(2023.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시범지역 공모 보도자료.
- 교육부인재정책실(2023.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 · 운영계획.
- 교육부(2023.2.27.),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예비 선정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2023.3.8.),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도입 본격 시동 보도자료.
- 교육부(2023.4.18.),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물길을 만드는 글로컬대학 보도자료.
- 교육부(2023.4.18.),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
- 충북대학교 · 한국교통대학교(2023.5), 혁신기획서-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서.
- 교육부(2023.6.20.), 대학 내 · 외부 벽을 허물고 대학개혁을 선도할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2023.7.12.), 글로컬대학 30으로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 가속 추진 보도자료.
- 정삼철(2023.3.21.), 중부시론 칼럼-충북라이즈 시범지역 지정의미와 과제.
- 하민지(2023.7.21.),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G-BRIEF 제184호.
- 최성은 외(2023), 세종시 고등교육 혁신전략으로서의 시비 유학제도 신설 · 운영 방안, 정책연구 2023-11.

기 획 특 집 0 4

지역과제 해결거점으로의 일본지방대학 혁신동향

김보람 /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Ⅰ 일본 '고등교육의 그랜드 디자인 답신'에 따른 대학개혁방향

일본에서는 1992년, 205만 명이었던 18세 인구가 2018년에 118만 명으로 줄었다. 대학생의 경우, 2018년 65만 명에서 불과 20여 년 후인 2040년에는 50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금도 지방 소규모 사립대의 40%가 정원 미달이며,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은 존립의 위기에 놓여있다. 2003년 이후 사립대 14곳이 6곳으로 통합되고 10곳은 폐교되어, 일부 명문대학을 제외하면 누구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 문부과학성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는 2018년 11월 '2040년을 향한 고등교육의 그랜드 디자인 답신'을 발표하고, 이후 그에 기초해서 대학개혁을 전개하고 있다. '2040년을 향한 고등교육의 그랜드 디자인 답신'은 일본이 당면한 대내적 과제인 저출산 ·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와 지방의 위기와 아울러, 장래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의 방향성과 전략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대학의 개혁원칙과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대학교육 및 연구시스템의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국공립 및 사립대학 공통), 둘째, 글로벌화, 산업구조 개편 등 시대와 사회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학의 교육 · 연구 및 경영의 질 제고, 셋째, 도전하고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 재정적 · 운영적 지원과 대학 스스로의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성 유지(사립대학),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의 경우 정부 지도하에 자주적 퇴출 유도(사립대학) 등이다.

대 · 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서 연구중점대학 및 슈퍼글로벌대학, 그리고 지역연계협력과 지역과제해결거점으로서의 COC+(Center of Community, 지(地 · 知)의 거점대학에 의한 지방창조사업)으로 나누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일본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대학'과 '글로벌화대학'을 중점지원하는

데 도쿄대, 교토대 등 13개 대학이 최고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대학으로는 동경예술대, 메이지대 등 24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글로벌선도대학으로는 모든 학위논문을 영문으로 작성할 것을 의무화한 아이즈대학과 최소 1년간 해외유학하는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국제교양대 등 특성화대학이나 혁신대학들도 선정이 되었다.

지(地 · 知)의 거점대학에 의한 지방창조사업(COC+)은 지자체, 대학, 기업이 연계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는데, 지역 네트워크 내에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청년층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방대학의 진학률을 높이고 지방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대학 지방창조 5개년 전략(2016)'을 발표한 바 있다.

〈표 1〉 지방창조 5개년 계획

전략	중점내용
지(地 · 知)의 거점으로 지방대학 강화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과제해결을 추진하는 대학평가 • 지역활성화 거점으로 국립대학 기능 강화 • 사립대학은 경영개혁 및 교육연구개혁을 통해 지역공헌
지역출신학생 정착 촉진	• 장학금을 활용한 대학생 지역정착 도모, 지방공공단체와 대학연계로 고용창출 • ICT활용으로 지방대 학생 도시부 대학수업 수강 • 지역자긍심 관련 교육추진
지역인재육성	• 지역산업을 담당할 우수 지역인재 육성 • 지역 글로벌리더 육성 • 고등전문학교 및 전문고교에서 전문직업인 육성

Ⅱ '지(地·知)의 거점대학'에 의한 지방창조사업

지(地 · 知)의 거점대학에 의한 지방창조사업(COC+)의 대표적 사례로 야마구치현의 '야마구치 미래창생인재육성 · 정착촉진 사업'을 들 수 있다. 2015년부터 5년간 국립야마구치대학을 거점으로 대학 · 단기대학 · 고등전문학교 등 12개의 고등교육기관, 광역지자체로 야마구치현, 20개의 기초지자체, 8개 경제단체, 18개 현내 기업 등 총 58개 기관이 참여한 사업이다.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기업과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참가 학생들의 지역취업률을 향상하여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마구치 미래창생인재육성 · 정착촉진 사업'의 주요사업으로는 '야마구치 미래창생 리더육성 프로그램'과 '야마구치 취업지원 매칭시스템', '학생취업지원' 등이 있다. '야마구치 미래창생 리더육성 프로그램'은 야마구치현 내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표 2〉 야마구치 미래창생 리더육성 프로그램 목표

구분	상세내용
야마구치 정신	지역행정 · 경제 · 역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글로벌 마인드	글로컬한 시점에서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능력
이노베이션 창출력	각종 정보를 활용해서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는 능력
협업력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능력
과제발견 · 해결력	스스로 솔선해서 과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도전 · 실천력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도전할 수 있는 능력

야마구치대학은 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4가지 실행조직과 3가지의 코디네이터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표 3〉 야마구치대학 COC+사업 관련 실행조직과 코디네이터 사업

구분		내용
실행조직	COC+사업본부	학내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조직, 사업전반에 관한 학내방침 결정
	COC+사업추진 위원회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교환 · 연락 등의 업무와 학내 체제 정비를 검토해 사업시행안 작성
	지역연계위원회	사업시행에 관한 학부 내 체제 정비 및 사업시행을 위한 대응을 하며, 각 학부장을 수장으로 하여 COC+사업추진위원회의 각부 대표자 및 각 학부 취업담당교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
	지역미래창생센터	사업에 관한 상담창구로 협업기관과 연락 · 조정하며, 사업시행에 있어 의견 취합과 공정한 관리 등을 수행
코디네이터	총괄코디네이터	각 코디네이터의 활동을 파악 ·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협업기관 간의 조정, 사업 전체의 진행상황관리와 매니지먼트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의 상세안, 예산안 작성시 중심적 역할
	지역산학연계 코디네이터	지역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대학연구 시즈(seeds)와의 매칭을 조절하며, 기업니즈 파악 시에는 기업이 요구하는 학생 자질, 역량 등에 관한 정보 수집
	학생커리어 코디네이터	YFL육성프로그램 전반을 매니지먼트하고, 협업학교와 협업기관과의 교육과정을 각종 조정 및 관리하며, 인턴십 등 산학연계교육을 기획 · 운영

III 지역산업발전과 신성장동력을 추동하는 지방대학혁신

새로운 시대 변화와 산업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성장산업을 담당할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지방 국립대학에 오히려 신규 학부를 설치하거나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바이오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등, 지방 창조와 지역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대학혁신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코치대학의 지역협동학부, 미야자키대학의 지역자원창성학부, 야마구치대학의 국제종합과학부, 오사카시립대학의 인공광합성연구센터, 하마마츠의과대학의 광의학교육연구센터, 나가하마바이오대학의 바이오클러스터 형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지방대학 · 지역산업창생교부금사업의 사례로는, 시마네현에 소재하고 있는 시마네대학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세계에 공급하는 특수강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항공기나 모터산업에 활용되는 첨단금속소재를 연구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타타라제철의 전통을 이어받은 특수강산업 클러스터(히타치금속, 중소기업그룹 SUSANOO)와 시마네대학, 마츠에고등전문학교 등이 연계하여 항공엔진과 세계최고 고효율 모터에 사용되는 첨단금속소재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연구와 전문인재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역의 금융기관도 함께 하고 있다. 시마네대학 종합이공학부에 '재료공학특별코스'를 새롭게 설치하여, 연구실에 조기 배치되거나 옥스퍼드대학으로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치대학에서 2015년 새롭게 신설한 지역협력학부는 지역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선진모델이 되고 있다. 지역협력학부의 학생들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촌락과 방치된 농령지 문제를 지역주민과 협력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방향을 모색한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지금까지 사회에서 길러온 지식과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액티브시니어들은 학생들의 커리어 상담자나 멘토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특산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브랜드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의해 지역협력학부 학생들은 졸업 이후에 지역사회 내에서 병간호 지원인력뿐만 아니라 예방의료, 건강빅데이터 해석, 평생학습, 관광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으며, 고치현을 과제해결 선진지로 도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일본 문부성이 '지역대학과 지역기업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연구프로젝트'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가나자와대학, 신슈대학, 토야마대학이 선정되었다. 이 사업에는 대학과 지역기업 이외에도 지역경제연합회, 경영자협회 등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기존의 지원에 청년들의 시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활성화에서 중요한 부분인 '교류', '관광', '먹거리' 등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산업에 대학생들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관광, 생활산업을 창출하는 인재가 길러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지역 내에서 만들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업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세 대학이 공통으로 추진하는 '엔진(ENGEINE)' 프로그램은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그 자원들의 매력을 발견하기 위해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력, 무에서 유를 창출하기 위한 상상력과 실행력을 지역기업들과 함께 길러가는 2년 과정의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활동이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3곳의 지역대학이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기업을 이해하는 활동이나 이벤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인턴십 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지역기업 관계자들과 인연을 맺고 접점을 만들면서 지역 내에서의 본인의 일과 비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기업도 대학생들의 참신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본인들의 기업 활동이나 사업 방식을 재조명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Ⅳ '지역연계플랫폼' 추진을 통한 지방대학 활성화 모색

이외에도 일본은 지방대학 활성화정책으로 지역연계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지역의 대학, 지자체, 산업계 등 다양한 유관기관이 논의의 장을 함께 구축하고 구체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현상 및 과제를 파악하고 지역의 미래비전을 공유하며, 지역의 과제 해결을 위해 연계협력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대학은 지역 니즈를 도입한 교육연구의 활성화와 대학 간 연계의 추진, 지역 내에서의 대학의 존재가치가 향상 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지자체는 대학의 지식과 인재를 활용한 지역과제 해결,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 촉진, 지역경제 기반 강화와 지자체 기능유지가 가능하다. 산업계에서도 산업계 니즈를 반영한 인재양성과 공동연구에 의한 기업활성화, 매력적인 고용창출 및 증가 등이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삼자 모두와 지역과 청년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하고 있다. 예산은 참여조직에서 회비를 징수하거나 정부프로젝트 예산, 기업판 고향납세 제도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 고등교육 기회와 인재 확보,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과제 해결과 지역진흥, 지역 활성화 등을 주요 논의사항으로 하고 있다.

지역연계플랫폼의 사례로 니가타대학은 사회연계추진기구가 중심이 되어 ① 지역의 과제에 관한 정보 수집, ② 지역의 과제 해결에 공헌하는 세미나, 강연회 등의 개최, ③ 지역의 과제 해결에 관한 정보제공, ④ 그 외 지역의 과제 해결이나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활동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니가타현 지역진흥국, 시정촌, 경제단체, 산업지원기관, 금융기관 등 77개의 단체가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

〈표 4〉 지역연계플랫폼 공유 · 논의 · 실행사항

구분	상세내용
지역 고등교육 기회와 인재확보	• 지역사회의 비전공유, 이해촉진 – 지역사회 · 지역산업의 비전 등 – 지역 고등교육 역할의 재확인 등 • 지역현상 · 과제의 공유와 장래 예측 – 대학 진학 시 인구동태, 지역사회 · 산업구조, 장래예측을 포함한 논의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과제 해결과 지역진흥	• 논의사항 – 플랫폼에서의 공통목표, 방향성 확인 – 목표 등을 고려한 행동계획, 지역과제의 해결책 – 지역 고등교육의 그랜드 디자인
지역사회 유지 및 활성화	• 과제 해결을 위해 실행하는 사항(예) – 지역과제 해결형의 실천적 교육프로젝트 제공 – 지역산업 진흥, 이노베이션 창출 – 대학 등 진학률(특히 역내 진학률)과 역내 정착률 향상책 – 외국인 유학생 수요와 사회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Ⅴ 지방대학 특성화전략과 창의적·실용적 대학개혁

이밖에도 지방대학의 특성화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 긴키대학교는 수도권이 아닌 관서지방에 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지원자 수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잘 알려진 명문사립대학은 아니지만, 실용성을 중시하는 실학교육으로 입지를 다졌다. 예를 들면 어류 양식 연구에 집중하여, 가두리양식법이나 참다랑어 양식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소가 벤처기업을 만들어 긴키참치라는 브랜드로 출원해 사업화하고, 대학법인 최초로 참치레스토랑(레스토랑명칭; 긴키대학교 수산연구소)을 개업하여, 일본 전국에 학교 이름을 알리는 것과 함께 대학운영의 재원 마련에도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 최초로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료를 대폭 낮추고, 100% 영어로만 대화하는 영어마을을 캠퍼스 내에 설립했다. 캠퍼스 디자인에도 힘쓴 덕에 관서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 1위를 차지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대학캠퍼스가 되고 있다.

한편, 이시카와현에 있는 가나자와공대 또한 입학생이 늘고 있는 지방대학 중 하나다. 가나자와공대에서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술자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프로젝트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는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서 현장과 요구조사, 과제해결까지 스스로 도모하는 액티브러닝프로그램으로서 지방대학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 MIT 등 해외 유수의 대학 40여 곳을 방문해 벤치마킹하여 이시카와현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다. 또한 학생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작기계와 부품들을 갖춘 실습실과 24시간 운영하는 자습실이 있어, 학생들이 자동차나 로봇을 스스로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덕분에 로봇콘테스트 세계대회에서도 우승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창의적인 교육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170개 이상의 기업들이 연구 제휴를 맺자고 제안한 바 있다.

Ⅵ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공인재 맞춤형프로젝트'

기업과의 연계 이외에도, 교토의류고쿠대학, 오사카시립대 등의 지방대학에서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의 다양한 과제를 발견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공공인재 맞춤형양성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공공인재 육성코스' 등으로 불리는 학부 또는 대학원을 개설하여 정규 학사행정을 운영하는데, 지자체는 이 코스를 수료한 졸업생들을 지역인재로 우선채용하고 대학에 행 · 재정지원을 비롯하여 사업예산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공공기관 또한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과제 해결과 관련한 현장실습 기회와 전문적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졸업생들을 지역인재로 우선 채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공공인재 육성코스'를 수료한 졸업생들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에 채용이 되어 활약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프로젝트 이후에 청년실업

률이 낮아지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하여 실시하는 고용창출 · 청년세대의 지방정착사업은 총무성이 제정한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연계에 의한 고용창출 · 청년세대 정착촉진 요강(2015년 4월)'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문부과학성과 총무성이 함께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대학 등이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추진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대학이 실시하는 고용창출 · 청년세대 정착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채택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총무성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고용창출 · 청년세대 정착사업을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표 5〉 특별교부세 조치대상 사업(대학사업과 지자체사업)

대학사업	지자체사업
[입학시 대책] ICT와 새틀라이트 캠퍼스를 이용한 도시부 대학과의 학점호환을 통해 지방대학 입학 촉진	
지방대학 진학자에게 거주하는 지역에서 도시부대학수업을 ICT와 새틀라이트 캠퍼스를 이용해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 (학점호환을 가능하게 하여 재학중인 지방대학 학점으로 인정)	– 수강공간 제공(시설 차용) – 증가경비에 대한 일부 부담(통신비 등)
[취업시 대책] 지역기업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지역기업과 학생들을 연결	
지역산업계와 연계하여 지역기업에서의 장기인턴십을 실시하는 등, 실천적인 직업교육을 실시 (필수과목화 학점인정)	– 대학과 지역기업 간의 연락조정(교통비, 자료작성비 등) – 인턴십 수용기업 발굴(교통비 등) – 인턴십 학생의 수용(인턴십 학생교통비, 숙박비 등) – 지역산업계에서 대학으로 강사파견 지원 (강사 파견비 등)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에서는 모든 대학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특성화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여감과 동시에, 지역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거점기관으로서 지방대학의 역할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변하는 곳은 살아남고 변하지 못하는 곳은 폐교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에는 모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라는 슬픈 비유가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듯이,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청년들이 정착하고 자립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그 동력을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방대학은 경영과 운영시스템, 교육내용에서도 담대한 혁신을 도모해 가야만 한다.

참고문헌

- 山口大学(2016).<地の拠点大学による地方創生推進事業COC+"オールやまぐち"で若者の山口での活躍をバックアップ！事業報告書>
- 文部科学省ホームページ<地方大学を活用した雇用創出・若者定着>
- 文部科学省ホームページ<地域連携プラットフォームこの構築>
- 文部科学省ホームページ<高知大学における地方草生の取り組み>
- 新潟大学ホームページ<地域連携プラットフォーム>

기 획 특 집 0 5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교(APU) 탄생 이야기와 지역혁신

김찬희 /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교(APU) 전 부총장·총장특명보좌

Ⅰ 들어가며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면 벳부는 꼭 가보고 싶어하는 일본의 온천 중 3위에 속한다고 한다. 그만큼 벳부는 한국에 잘 알려진 온천 휴양도시이다. 벳부 시내 중심지에서 차를 타고 약 30분 정도 달려 표고 330m 산 위에 오르면 필자가 근무하는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교(APU)가 보인다. 정문으로부터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면 분수대가 있는 광장이 보이고, 그 광장으로부터 동쪽을 바라보면 온천 연기가 하얗게 피어오르는 벳부만의 아름다운 정경이 펼쳐진다. 필자는 이 대학의 창립 멤버로 2000년 개교 당시부터 근무하여 올해 2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학생들에 의하면 이곳은 하늘에 가까운 '천공'의 세계, 벳부 시내는 천공 아래에 있는 속세인 '하계'로 부르고 있는데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학원제도 이 명칭과 같은 천공제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많은 국제학생이 입국하지 못하게 되면서 2020~2021년에는 온라인 중심의 수업이 실시되었다. 2022년부터 이루어진 일본 정부의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완화조치로 올해에서야 입학식을 비롯한 전면 대면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APU는 코로나 이전의 활력 있는 캠퍼스로 다시 되돌아왔다. 본고에서는 우선 세계 106개 지역과 나라에서 학생들이 모인 캠퍼스로 작은 국제연합(UN)이라고 불리는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교(APU)의 탄생과 성공 스토리를 소개하겠다. 그리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과소화, 고령화, 저출산 문제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위한 APU대학 유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지방대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 APU캠퍼스 풍경(위) / 매년 10월 말에 개최되는 학원제인 천공제(아래)

Ⅱ 학교법인 리츠메이칸

APU는 일본 교토시에 본부를 두는 학교법인 리츠메이칸이 설립한 대학이다. 2개의 대학과 초중고를 합치면 학원 전체의 학생 수는 약 4만 9천명, 교직원 수는 2,760명이 되는 대형의 학교법인이다. 말하자면 법인 내에 1개의 초등학교, 4개의 중고등학교, 2개의 대학을 갖추고 있는 종합형 학원이다. 리츠메이칸의 명칭은 메이지유신 다음해인 1869년 사이온지 긴모치라는 일본의 귀족 출신 정치가이자 교육자가 교토 궁전 택지 내에 개설한 사설 리츠메이칸에서 유래한다. 교토를 중심으로 시가현 오사카 등에 캠퍼스를 전개하고 있는 리츠메이칸대학교는 1900년 일본 정치가이자 관료 교육자로 활동한 나카가와 고주로가 설립한 교토법정대학교에 기원을 두고 있다. 리츠메이칸의 명칭은 맹자의 진심장에 보이는 "殀壽不貳,脩身以俟之,所以立命也(인간의 수명은 천명에 의해 정해져 있다. 수양을 쌓고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니라)"에서 따왔다.

III APU는 어떻게 탄생했나

01 리츠메이칸의 위기의식과 혁신정신

APU는 학교법인 리츠메이칸의 본거지로 교토에서 멀리 떨어진 온천 관광지 오이타현 벳부시의 산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학교법인 리츠메이칸은 약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며 전국 명문 사립대로 자리잡은 리츠메이칸대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조건이 좋지 않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방에 글로벌을 지향하는 새로운 대학 설립을 추진한 것일까? 일본의 전통이 살아있는 교토에 위치한 리츠메이칸대학교는 1980년 후반부터 교토시에 단과대학으로 이공대학, 국제관계대학을 설립했는데, 그 후에 이공대학과 경제·경영대학 캠퍼스를 교토시 이외 지역인 시가현 쿠사쓰시로 이전하는 등 타 대학에 앞서 교육에 대한 혁신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법인 리츠메이칸이 이처럼 다양한 단과대학을 세우며 교육혁명을 일으키게 된 계기는 교직원들이 항상 위기의식과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88년 국제관계대학을 개설한 리츠메이칸은 이 시대에 만연했던 유럽과 미국 중심의 국제화 열풍에서 벗어나 아시아 · 태평양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02 오이타현과 벳부시의 과소화, 고령화, 저출산과 대학유치

한국에서 오이타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자주 묻는 질문이 오이타현은 무엇이 가장 유명하냐는 것이다. 그 때 필자는 주저하지 않고 해산물로는 세키사바(고등어), 세키아지(전갱이), 가자미 생선회를 추천한다. 또한 소주의 브랜드로는 주식회사 삼화주류가 생산하는 이이치코(iichiko) 등이 유명하며, 소주를 뜨겁게 마시는 습관도 오이타에서 시작되었다. 이 밖에도 오이타 특산품으로 유자후추, 마른 버섯, 카보스 등이 일본 전국에서도 유명하다. 이처럼 오이타현의 특산품을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인물은 1979년부터 2003년까지 24년간 오이타현 지사를 지낸 히라마츠 모리히코였다. 그는 지사로 부임한 다음해인 1980년부터 이렇다 할 특산품이 거의 없는 오이타현의 상황을 개혁하고자 1촌 1품 운동을 고안하여 추진했다. 즉 하나의 촌에 하나의 유명한 상품을 만들어 전국과 해외로 발신하는 혁신적인 브랜드 전략 운동이었다. 이러한 브랜드 전략을 성공시킨 히라마쓰 지사가 오이타현이라는 지역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 대학 유치였다. 그렇다고 오이타현과 벳부에 대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이타현은 아시아에 가까운 지역으로 그가 생각했던 새로운 대학은 오이타와 아시아를 이어주며 1촌 1품 운동과 같은 기존의 장벽을 넘어선 혁신적인 대학이었다. 당시 오이타현과 벳부시는 일본 내의 지방도시 중에서 과소화, 고령화, 저출산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던 곳이었다. 특히 현재 APU가 위치하고 있는 벳부시는 예부터 온천치료를 목적으로 고령자들이 많이 거주해 온 지역이며, 인구 12만 정도의 규모에 비하면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타 지역에 비해 꽤 많은 편이다. 더욱이 온천 관광지라서 숙박업과 음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노동력을 창출해 내는 회사나 기업이 없어서 젊은 노동력이 유입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오이타현이 구상한 대학유치 공약과 학교법인 리츠메이칸이 계획한 국제대학 구상이 맞아 떨어져 탄생한 것이 APU라는 대학이다.

〈그림 2〉 온천관광지 벳부의 풍경(좌)/ 지옥온천 중의 하나인 백색 온천(우)

03 1990년대의 버블경제 붕괴와 학교법인 리츠메이칸

한편 1980년대의 일본 경제는 국제적인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으며 과학기술로 증명이 되는 공업제품 수출 중심으로 나라 전체가 움직이던 시기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진입하면서 버블경제 붕괴, 금융의 글로벌화 등 심한 폭풍우 속에 휘말리면서 활로를 찾지 못한 체 방황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때에 국제화 · 정보화 · 개방화를 통해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APU와 같은 대학 구상이 싹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운 속에서 학교법인 리츠메이칸은 학원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로 학원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 1994년 당시 리츠메이칸의 전무이사였던 가와모토 하치로(후에 이사장이 됨)는 "100주년 기념사업을 구상할 때 돈이 얼마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부터 하면 커다란 꿈은 구상할 수 없다. 대학도 기업도 국가도 조직이 정형화되어 버리면 쇠퇴의 길로 향하게 된다. 항상 만들어 놓은 것을 점검하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 혁신이라는 에너지야말로 활력을 낳게 된다"고 하며 새로운 사업의 모습을 제시했다. 마침 일본 정부도 유학생 1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3만 명 정도로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때였다.

04 아시아·태평양시대 도래와 APU

사카모토 카즈이치 APU 초대총장은 당시 일본에서 아시아 · 태평양을 연구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아시아 · 태평양학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곳은 없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의 아시아 · 태평양학은 일본인들만이 모여 그것도 미국이나 유

럽을 거친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를 하는 것이 주류였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서 직접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하는 것이 진정한 아시아 · 태평양학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의 나라와 지역 사람들이 모여 각 나라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학문을 창조하고자 기존의 연구와 다른 아시아 · 태평양학을 실현하는 장소로 APU와 같은 국제대학이 필요했던 것이다.

05 대형 공사협력 사업과 "3개의 50" 구상

이처럼 학교법인 리츠메이칸과 오이타현, 벳부시가 추구하는 구상이 일치가 되어 1996년 신 대학의 명칭이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교(APU)로 정해지고 그 후 2000년 APU가 개학을 했다. APU 설립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부지 제공과 창립을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대형 공사협력 방식으로 설립됐다. 총 공사비 297억 엔(약 2970억 원)에 대해 오이타현이 150억엔(약 1500억 원)을 보조하고, 대학이 위치한 벳부시가 42억 엔(약 420억 원)과 대학부지(시유지 약 42ha)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한 일본 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계에서 40억 엔(약 400억 원)이 넘는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졌다. 당시 대학설치를 위해서는 일본 문부성(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했다. 학교법인 리츠메이칸은 이미 단과대로 교토에 국제관계대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대학을 만들려고 하면 문부성의 승인을 얻기 어려웠다. 또한 지금까지 받아들인 유학생 정책과 같은 방법으로 학생을 모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대도시인 도쿄나 오사카가 아닌 시골 지역인 이곳에 학생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거기에서 나온 발상이 유학생 50%, 교원 50%, 출신국 수 50%인 "3개의 50"이라는 참신한 아이디어였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종래의 학생 모집방식과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종래의 일본 대학에서 하는 유학생 모집 방법은 일본에 유학을 온 후 일본어 학원이나 대학에서 일본어를 미리 배워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을 받아들이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APU가 생각해 낸 것은 입학 당시에는 일본어를 못하더라도 영어가 가능한 학생을 우수한 고등학교로부터 직접 추천받는 정책이었다. 그로 인해 현재 106개국이라는 다국적 학생의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

Ⅳ 언어 교육에 대한 도전과 다문화 캠퍼스 실현

APU가 국제학생을 50% 받아들이는 데는 몇 가지 장벽이 따랐다. 주택문제, 경제적 격차 문제와 함께 일본어 장벽이었다. 일본어 장벽의 턱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것이 영어와 일본어 2언어 교육이었는데, 종래의 일본 대학에서는 도입하지 않았던 시스템이었다. 당시 일본에 와 있던 유학생의 80%는 한국 · 중국 · 대만 출신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본유학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다국적 학생이 APU에 모여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 캠퍼스 실현은 불가능했다. 단지 영어만으로 진행하는 수업이라면 미국 · 영국 등지에 얼마든지 있다. APU는 국제학생이 일본어와 일본어 전문 과목을 이수해서 졸업 후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일본어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커리큘럼을 구축함과 동시에 일본인 학생도 마찬가지로 졸업 때까지 일본어와 영어, 2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 덕택에 현재 APU는 세계 106개국과 지역에서 학생들이 모여 공부를 하는 '멀티컬처럴 캠퍼스' 실현이 가능했다. APU는 저학년 때 일본어와 영어, 2개 언어 교육을 철저히 시켜 고학년에 진학하게 되면 영어와 일본어 양쪽 어느 언어로도 자유스럽게 전문 과목 수강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APU 수업의 약 90%는 영어와 일본어 양쪽으로 제공하고 있다. 캠퍼스의 공용어는 영어와 일본어이며 이외에도 한국어, 중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타이어, 스페인어 6개 언어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선택과목으로 이들 아시아 지역 언어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다. 한국어는 6개 언어 중 가장 인기가 있는 언어 중 하나인데, 이들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이 캠퍼스에 넘치기 때문에 배운 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점이 타 대학과 다르다. 교실에서 배운 아시아 · 태평양지역 언어를 사용하여 각국 학생과 교류하면서 아시아 · 태평양지역학을 배울 수 있다는 점 또한 APU만의 독특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3〉 다문화 캠퍼스 내에서 매주 개최되는 각국의 멀티컬처럴 이벤트(좌)
각국의 카레라이스 경주대회를 통해 지역 주민과 교류(우)

Ⅴ 학생 기숙사 AP하우스 운영과 뒤섞음 교육

일본인 학생과 약 60여 개국 이상에서 온 신입생들이 같이 섞여서 생활하는 곳이 AP하우스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어를 잘 모르는 국제학생들의 장벽 중의 하나가 주택문제다.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대도시에서는 '외국인 거절'이라는 부동산도 종종 보이곤 한다. 더욱이 외국인이 집을 구하려면 일본인의 보증이 필요했다. 아무 연고가 없는 국제학생이 보증인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일본어와 일본 생활습관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지역주민과 잘 어울려 트러블 없이 벳부 시내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당시 많은 문제에 봉착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학생들이 1년간 뒤섞여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쌓고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상담 등의 일본사회와 일본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AP하우스에서 실시했던 것이다. AP하우스에는 이들 신입생들을 도와주는 RA(레지던트 어시스턴트)를 두고 있는데 이들은 일본어와 영어가 가능한 기숙사 경험이 있는 선배들로서 후배들과 같이 AP하우스에서 생활하면서 후배들의 일본 생활 적응교육과 학과상담 등 기숙사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 RA는 매학기 24~3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언어능력, 기숙사 운영능력 등을 포함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총 60명 이상의 RA가 활동하고 있다. 그들 RA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비롯하여 커뮤니케이션 능력, 타임매니지먼트 능력, 이문화 적응능력 등 졸업 후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쌓게 된다.

〈그림 4〉 신입생들이 학교와 일본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RA

Ⅵ 교수와 직원이 뒤섞여 일하는 APU : 사무직원 출신의 이사장과 부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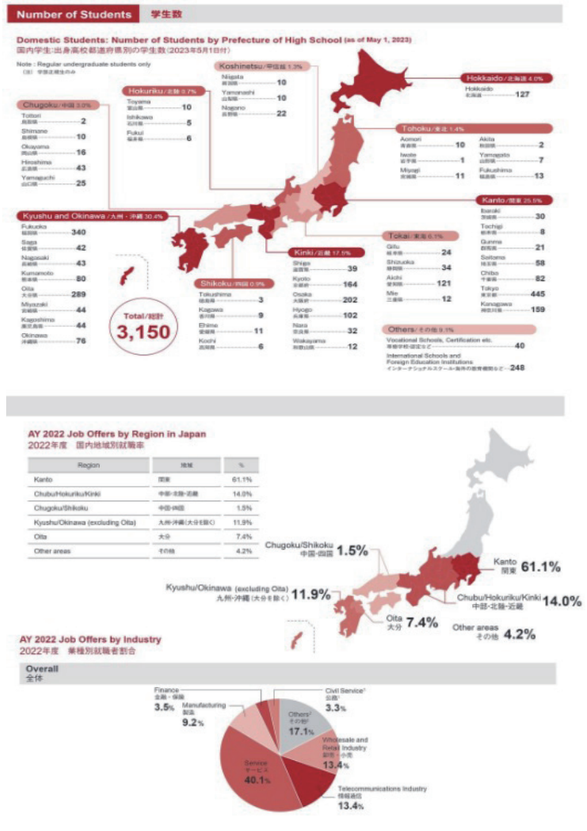
학교법인 리츠메이칸은 대학의 설립과정부터 학교운영, 학생모집, 입시면접, 학생지원 및 취직, 졸업 후의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 등 교수와 직원이 하나가 되어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말하자면 교수와 직원이 같이 섞여 경영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은 학교법인 리츠메이칸의 전통이라 할 수 있는데 APU도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 대학들은 사무직원 출신의 대부분이 승진해도 대개 과장급에서 정년을 맞이한다고 듣고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 리츠메이칸과 APU는 이사장이 사무직원 출신이고, 학교법인의 상무이사 등 중요 직급에 많은 사무직원이 배치되어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 필자는 APU 부총장과 총장특명보좌 등 20년 이상 경영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수의 부총장 중 한 명은 반드시 사무직원 출신으로 채워진다. 이와 같은 경영방식은 한국에는 별로 없는 학교법인 리츠메이칸과 APU의 특이한 경영방침이라 할 수 있다. 사무직원들이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과장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장 · 부장 · 이사 · 상무 · 전무 부총장 · 이사장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교수와 대등한 입장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우리 대학 사무직원들은 학교일에 매우 적극적이며 한국 대학에 비해 활력이 넘쳐 보인다. 학교경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대학들의 경영 방침도 교수와 직원이 대등한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를 위해 많은 성과를 내고 공헌을 한 사무직원들이 그 업적에 걸맞게 계속해서 승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 그래야만 교수뿐만 아니라 사무직원들도 학교에 대한 주인정신과 애착을 가지고 학교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도전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Ⅶ 지방에 위치하지만 수도권 대학보다 강한 APU

2000년 개학 전 APU의 지명도는 해외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전무한 상태였다. 당시 일본 소재 대학들은 국내와 해외에 있는 일본어 학교를 통해서 일본어가 가능한 학생만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APU는 일본어를 전혀 못해도 영어가 가능하면 입학할 수 있고, 저학년 때 집중적으로 일본어를 학습해서 고학년이 되면 일본어와 영어, 양쪽 언어로 전문수업을 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APU는 교수와 직원이 한 팀이 되어 세계 각국의 우수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영어로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어필해서 초기 입학 목표인 우수학생 421명 유치에 성공했다. 개교 후 23년째 되는 APU는 지명도가 많이 올라가 현재는 주요국인 한국,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타이, 베트남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학생모집을 하고 있다. 이외의 나라는 해외 에이전트와 대사관 루트 등을 통해 우수한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영국의 고등전문교육지인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THE)이 발표한 '일본대학

랭킹 2023'에서 대상이 된 271개교 중, APU는 전국 사립 대학교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 西일본 대학에서는 6년 연속으로 1위, 국제 분야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상위 3위를 차지한 대학들은 모두 도쿄 소재 대학으로 오이타현에 위치한 대학이 전체 순위 4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개교 후 23년밖에 안 되는 대학으로서는 커다란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성공의 비결은 APU가 세계형 대학을 추진해 온 것과 함께 일본 국내에서도 북으로는 홋카이도, 남으로는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학생들이 이곳 오이타에 몰려온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없다. 2023년도 APU 국내학생 출신 수는 전체 3,150명인데, 이중 대학이 위치한 오이타현 출신이 289명(9.2%)인 데 비해 동경 445명, 후쿠오카 340명 등 타지역 출신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22년도 APU 전체 취업률은 97.3%를 자랑하는데, 이중 일본 국내의 지역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오이타가 7.4%인 데 비해 동경을 포함한 관동권(수도권)이 61.1%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림 5〉 APU대학 일본 지역별 출신 학생수(위)/ APU대학 일본 지역별 취업률(아래)



오이타현이라는 지방에 있는 대학이지만,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후의 취업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지방대학도 학생 모집과 취업에 있어서 세계형, 전국형 대학을 추진해야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경쟁에 밀리지 않는 대학으로 남게 될 것이다.

Ⅷ 나가면서 : APU가 가져오는 지방경제 등의 파급효과

2023년부터 APU는 '우리들이 세계를 바꾸어 나간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단과대로 "서스티너빌리티 관광대학"을 개설하여 제2의 개학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다. 새로운 대학은 지속가능한 사회 형성과 관광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를 중요시하는 대학이다. 오이타현과 벳부시의 많은 지원 협력 하에 설립된 APU는 개학 당시부터 지역공헌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인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개학 후인 2001년 오이타현 분고오노시와 체결한 교류협정을 시작으로 오이타현 내 18개 시정촌을 비롯, 도자기로 유명한 사가현 아리타정과 미야기현 게센누마시, 후쿠오카시 등 오이타현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와도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지역 살리기와 관광진흥, 환경 문제 등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서로 협력하여 조사 연구와 해결을 위한 조언 등을 행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오이타현 분고오노시에는 '마나노 장자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데 필자가 학생들과 함께 현장조사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마나노 장자 전설'의 기원이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서동 설화에 있음이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서동 설화의 고장인 전북 익산시와 오이타현 분고오노시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KBS역사스페셜 "백제사 최대 미스터리 서동설화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림 6〉 서동설화가 전해지는 분고오노시를 방문한 국회문화관광산업연구회(좌)
APU학생들의 지역교류 활동(우)

이 밖에도 오이타현 우스키시와는 역사적인 무사 저택에서 학생들이 직접 숙박체험을 하면서 발견한 경관의 개선점과 역사적 건물을 활용한 우스키시의 새로운 매력을 시에 제안하고 있다. 또한 도도로키 히로시 교수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에도시대 때 막부의 직할 지배지인 오이타현 히타시와 나카츠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오이타현 사이키시와는 학생단체와 시교육위원회가 협력하여 2006년부터 '사이키시 국제교류지원 어드바이저'로 국제학생들이 다수 임명되어 초 · 중 · 고등학교의 영어수업 지원과 교류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오이타현 내의 고등학교(약 40개교 정도)와도 교수와 학생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모의 수업과 영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공헌과 교류활동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7〉 관광지 벳부의 축제에 시민과 함께 참가, 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APU 학생들

2010년 APU 개학 10주년을 맞이하여 조사 발표한 '대학유치에 따른 파급효과 검증'에 의하면, APU가 유치되어 오이타현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가 연간 211.7억 엔(2,117억 원)임이 밝혀졌다. 또한 1980년 이후 감소의 길로 걷고 있던 벳부시 인구가 2000년 APU가 개학한 이후 12만 명 전후의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인구감소를 저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APU가 존재함으로써 오이타현의 인구 만 명당 유학생 수가 일본 전체에서 1위. 벳부시의 인구 만명 당 차지하는 학생수는 전국 평균의 3.1배, 유학생 수로는 26배 등 관광지로서의 벳부뿐만 아니라 '학원도시 벳부'로서 새로운 일면이 정착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PU의 학생들이 초 · 중 · 고로 직접 나가는 출장강의와 오이타현 주민 대상 공개 강좌 등의 교육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지역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유학생과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살리기 활동, 학생들의 지역행사 참가 등 오이타현이 APU를 유치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적 측면에서의 공헌은 유치 당시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지방대학도 APU와 같은 새로운 도전정신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및 연계를 통해 타 지역에 없는 매력 있는 학교 운영을 모색한다면 수도권 대학과 세계대학을 능가하는 성공한 대학으로 남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APU誕生物語編集委員会(2009), 立命館アジア太平洋大学誕生物語―世界協学の大学づくり―, 中央公論新社
- 崎谷実穂 · 柳瀬博一 · 糸井重里(2016), 混ぜる教育, 日経BP
- 사키야미호 야나세히로이치 지음, 김대식 감역(2018), 대학의 위기, 뒤집어보면 기회다,매일경제신문사
- 立命館アジア太平洋大学：https://www.apu.ac.jp/home/
- 大分県別府市観光協会：https://kyokai.beppu-navi.jp/
- 大分県 · 別府市(2010), 大学誘致に伴う波及効果の検証：立命館アジア太平洋大学（APU）開学10周年を迎えて

부기

본고는 2023년 5월 3일, 'APU의 개학과 성장배경' 조사차 APU를 방문한 대전세종연구원 김영진 원장과 이형복 기획조정실장과의 대담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원고 투고 기회를 제공해 주신 김영진 원장님과 이형복 실장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특 별 기 고

평생교육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과제

임숙경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혁신국 전문관

Ⅰ 서론

저출산, 고령화의 세계적 추세는 경제, 사회, 교육 등 세계 각국의 정책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으며, 지방에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사회적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다른 국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생산가능인구(15~65세)의 핵심인 청년인구 비율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OECD(2022)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67년 사이에 현재 우리나라 인구 5,100만 명보다 1,200만 명이 감소, 생산가능인구는 1,9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로 인해 인구는 고도로 집중되고 도시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별 인구 격차의 심화는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더해 특히 비도시 지역에 교육, 의료, 편의시설 등 이른바 '웰빙' 측면에서 지역적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지역소멸과 지역격차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2018), 제5차 국토종합계획(2019), 한국판 지역균형 뉴딜(2020) 등을 통해 지역 양극화와 쇠퇴에 대응하는 전략을 추진하여 왔으나 모든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균형잡힌 성장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을 교육정책으로 보고 지역교육 여건 개선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다수 채택하고 있다. 특히 지방인구 유출을 막는 '댐' 역할로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지방대학 관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지역주도성장모델	지역대학을 활용하여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 · 양성하고 지역단위의 로컬 브랜드 지원 시스템 구축
관광산업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특화 관광개발, 미래융합형 관광 인재양성 및 혁신적 관광벤처 육성
지역맞춤형 창업 · 혁신 생태계	지방대학 중심으로 혁신 캠퍼스타운,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융합지구 활성화하여 창업 · 혁신거점 마련
벤처생태계 구현	거점대학–신산업벨트 연계 창업중심대학 확대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지방대학 부지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신산업 거점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일자리사업 재구조화
지역 성장 거점 육성	지역특화발전을 지원하고, 첨단산업단지에 혁신융합캠퍼스 등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촉진
지방과학 기술주권	지역대학 기초연구 활성화, 지역대학–연구소 등 혁신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특구 고도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약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역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지역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대학중심 창업생태계	창업 교육 거점대학,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을 활용하여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
지역맞춤형 인재육성	교육자유특구 운영, 지역대학 중심 지역인재–취창업–정주 체계 구축, 우수 유학생 유치,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등

자료: 교육부(2023b),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시범지역 공모" 보도자료, 재구성

현재 지방대학의 상황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미충원 및 등록금 수입 감소라는 어려움으로 위기 상황을 넘어 대학 소멸과 그에 따른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4.9%로 2011년과 비교해 4.3%p 감소했다. 수도권 대학은 99.2%로 2011년 대비 0.3%p 감소에 그쳤지만, 지방대학은 6.8%p 감소한 92.3%였다〈표 2〉.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등록금수입 증감 추계 결과 2020~2024년 기간 지방 사립대 등록금수입은 17.5% 감소, 만18세 학령인구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2040년 지방 사립대의 등록금수입은 45.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11년 대비 2021년 신입생 충원율(정원 내) 및 입학정원 감축률 (단위: %,%p)

구분	주요 내용						입학정원 감축률	
	대학			전문대학				
	2011년	2012년	증감	2011년	2012년	증감	대학	전문대학
수도권	99.5	99.2	-0.3	100.0	86.6	-13.4	3.0	19.1
지방	99.1	92.3	-6.8	94.2	82.7	-11.5	12.5	38.0
전체	99.2	94.9	-4.3	96.4	84.4	-12.0	9.2	30.8

자료: 연덕원(2022), 위기의 지방대학, 원인과 해결방안, 대학연구소, 재인용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월 19일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에서 교육개혁 3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학개혁 주요 과제에 대한 종합 설명을 포함하였다. 정부가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학은 그에 따르기만 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격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대학이 각자의 여건에 맞게 독자적인 혁신안을 지정한다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

며 '글로컬대학 30'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을 설명하였다.

2022년 12월 발표된 제5차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은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그동안 평생학습이 주로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 주력하였고, 지자체 ·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 확대 · 강화 및 사회부총리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교육정책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지방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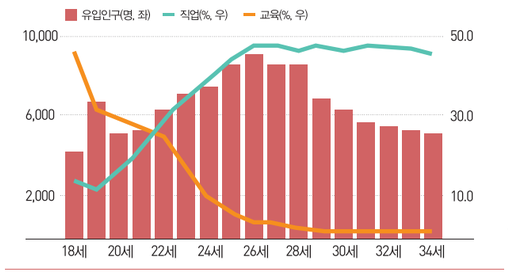
II 고등교육 정책 동향

01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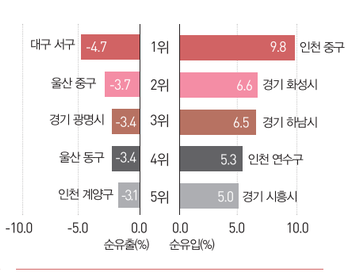
정부는 지방대학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바란다.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지역혁신의 주체인 대학,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기업 등이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과 가장 큰 차별점은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한다는 부분에 있다. 지방주도적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지역 스스로 성장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지방대학 중심 지역혁신을 위한 인재육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령기 인구 감소와 함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며 지방대학과 지역은 공동으로 위기에 직면하였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신산업 성장이 인재 · 연구개발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과 지방대학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1차 청년인구 유출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18세 시기에, 2차 청년 유출은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취업하게 되는 25세 이후 이루어진다〈그림 1〉.

〈그림 1〉 청년인구의 연령별 수도권 유입 규모와 전입 사유



〈그림 2〉 시군구별 순이동률 5순위



박한우 등(2023)은 이렇게 급변하는 지역과 지방대학의 환경과 여건 악화에 대해 지방대학 위기의 삼각파도를 제시하고 있다〈표 3〉.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수도권 대학만 정원을 채우고 지방대는 전멸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지방대 침체에 따른 지역혁신 능력 위축과 소멸우려로 이어진다고 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활성화 지원을 강조하였다.

〈표 3〉 지방대 위기 삼각파도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기회 쏠림	4차산업혁명
특징	2021년 기점 입학정원 미달 부족 인원 1.6만 명	교육, 일자리, 문화 등 기회의 수도권 쏠림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으로 일자리 구조 급변
현상	2021년 전체 대학 미충원율 8.6%(40,586명)	2021년 지방대학 미충원 전국대비 75%(30,458명)	사무직은 판교까지만, '판교라인' 임직원 수 7만 명 (2030세대: 63%)
위기	2040년 부족 인원 20.9만 명 도달	2040년에는 지방대학 소멸 위기	입직 기회의 양극화로 지방대학 위기 가속화

자료: 박한우 등(20230),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의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 역할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생산과 혁신창출에서 근접성(proximity)을 재조명하여 산업, 과학기술, 인구, 일자리 등 주요 정책에서 "지역 주도성"을 부각하였다. 교육부는 지역발전 · 성장의 성공요인으로 대학이 지역 주요 정책 및 사업 전반에 적극 참여하는 지자체–대학–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 대학지원정책으로 대학지원사업은 사업별 목적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대학의 지역과의 연계 유인이 부족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은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면서 대학 재정 투자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며,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학지원 예산 비중은 4%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표 4〉. 대학은 중앙정부 재정사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자체와 상생을 위한 의지를 갖고 지역 발전과 연계하려는 유인이 부족했던 것이다.

〈표 4〉 2021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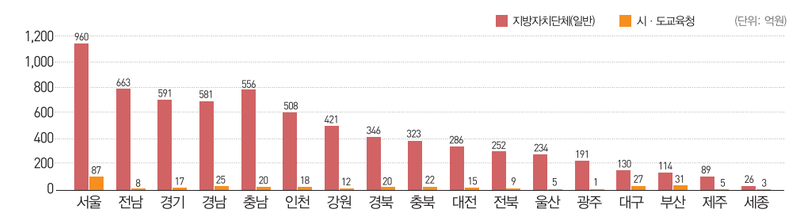
(단위: 개, 억 원, %)

구분	중앙정부			지차체	합계
	교육부	타부처	정부 소계		
사업수	110	895	1,005	2,039	3,044
지원액	108,988	46,979	155,967	6,596	162,563
지원액 비율	67.04	28.90	95.94	4.06	100.00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2022), 2021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 분석보고서.

2021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2,039개의 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총 6,596억 원을 지역대학에 지원하였다. 이 중 일반자치단체는 1,775개의 사업에 총 6,271억 원(95.07%), 시 · 도교육청은 264개 사업에 총 325억 원(4.93%)을 지원하였다〈그림 3〉.

〈그림 3〉 지자체유형별×지역별 재정지원 현황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2022). 2021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 분석보고서.

02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정책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에서 ①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②지역인재 투자 협약제도, ③수요 맞춤형 교육, ④지역거점대학(원) 육성, ⑤대학 중심 산학협력 · 평생교육, ⑥전문대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 등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행 · 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 · 지역대학 · 지역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계획은 이전 정부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한 권한이양이다.

교육부(2023a)는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3월 9일 7개의 시범지역을 선정 발표하였다. RISE는 대학지원의 행 ·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 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다. 오랜 기간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던 대학지원 방식을 새로운 지역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지자체의 대학지원 조직 · 인력 정비, 관련 법령 · 조례 정비 등 체계적인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교육부, 2023b)는 의견에 7개의 시범지역에서 RISE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표 5〉 지역별 라이즈센터 지정 · 운영 예정 기관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남평생교육진흥원 (가칭 인재양성재단으로 전환 추진)	경북연구원 →'28년 이후 법인 별도 설립 추진	대구정책연구원 →'28년 이후 법인 별도 설립 추진	부산테크노파크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28년 이후 법인 별도 설립 추진	충북연구원

관련 재정은 2025년부터 교육부 5개 사업(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 · 규모를 조정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2조원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하고, 추진체계에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 신설을 통해 지역의 대학지원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 · 도는 지역 발전 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 지원 계획 수립 시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문화도시 2.0 등 지역 단위 혁신사업이나 타부처 지역주도 정책을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정책메뉴판을 부처 협의와 조율 후 2024년부터 본격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3).

이와 함께 대학교육체제 전반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20%(약 30개교 내외)를 혁신 선도대학으로 육성하여 나머지 80% 대학의 혁신과 변화를 유도하는 글로컬대학도 추진중이다. 대학 주도의 자율적 혁신 추진으로 체질을 전면 개선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존의 소극적 지원에서 지역대학과 상생하는 파트너로 전환하게 된다. 올해 108개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15개 대학이 지난 6월 20일 예비지정〈그림 4〉 되어, 10월 10개의 본지정 대학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본지정 신청서는 광역지자체에서 취합 · 제출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준비중이다. 글로컬대학이 제시하는 새로운 산학협력, 과감한 구조개혁, 평생학습 · 창업 · 유학생 유치 등의 모델이 대학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림 4〉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

03 규제개혁으로 대학자율 확대 및 지자체 대학지원 권한 확대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개선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사립대학(법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제고하였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4차산업혁명의 도래, 융·복합 교육의 확산, 비약적인 IT 기술 발전으로 인한 온라인 교육 활성화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1996년에 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전면개정을 추진 중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추진하면서 교육부가 적극 개선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표 6〉과 같다.

〈표 6〉 대학자율 혁신 및 지자체 대학지원 권한 확대를 위한 교육부 규제개혁 추진 사항

맞춤형 규제 특례	RISE시범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방대육성법 제22조)으로 지정하여, RISE 계획 실행에 필요한 규제 특례 적용 – 규제특례 심의시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
시·도 권한 위임	기획·예산배분 및 사업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범지역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일부 승인·인가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도지사의 사전 검토의견 수렴 절차 운영(지방대육성법 등 개정 추진)
부령·지침 등 개정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히 완화 및 폐지가 가능한 규제를 최대한 발굴하여 즉시 개선
법령 개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전면 개정을 신속 추진하되, 현장의 요구가 높은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
타부처 규제	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활용하여 지역–대학 협력을 통한 혁신적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타 부처의 대학관련 규제도 적극 발굴하여 규제혁신 요청

이상과 같이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네 가지 전략으로 ①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②글로컬대학 30 육성, ③대학 규제 혁신, ④선제적 대학 구조개혁을 강조하며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중단 없는 교육개혁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2023.6.2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III 평생교육 정책 동향

01 유네스코가 그리는 평생교육

2022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모로코 왕국의 마라케시에서 대면 및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 VII)에서 142개 유네스코 회원국, 시민사회단체(CSOs), 사회적 파트너, 유엔 산하기구, 정부간 기구, 청소년 및 민간부문의 대표가 모여 성인학습·교육의 변혁적 힘을 활용하기 위한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 마라케시 실행계획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문은 성인학습·교육 분야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과 그 상반된 영향력에 주목하고 정부와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 기술, 역량을 습득하기 위한 전략'과 '학습정책'의 개발 및 시행의 필요성에 더욱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 불러일으킨 사회 및 직업 세계의 변화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술 습득(reskilling)과 직무 숙련도 향상(upskilling)에 대한 전략 수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노인을 포함한 모든 학습자에게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습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촉진하고, 기술이 기존의 사회 격차를 더 벌리고 새로운 격차를 만드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전략과 정책 및 도구를 구축하고자 한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접근성을 높이고, 온라인 상의 권력관계를 해결하며, 기술 남용을 방지하는 평생학습을 위해서 대면·원격·혼합 형태의 새로운 교수 및 학습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

일의 미래를 위한 성인들의 대응 방안도 강조한다. 인구 변동, 4차 산업혁명, 세계화, 기후변화 등은 경제와 노동시장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일의 성격과 고용 구조, 내용, 일에 필요한 역량과 기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에서 일로(education–to–work)'라는 선형적 이행은 수십 년 동안 지배적인 패턴이었지만, 성인들의 직업 생활 경로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평생학습의 과제는 전 생애에 걸쳐 관련 지식과 역량 및 기술을 유연한 방식으로 공평하게 습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직업 지도뿐만 아니라 취업, 양질의 일자리, 경력 개발과 창업 활동에 대한 학습 지원 등이 포함된다. 고령화 세상에서 점점 더 많은 성인들이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사회에 이바지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복을 누리는 등 직업 후 활동(post–work activities)을 준비하도록 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형태(형식, 비형식, 무형식)의 평생학습, 모든 부문과 분야, 대면과 온라인 및 혼합 학습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사이트, 그리고 다양한 학습자 집단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업 세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공동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청년과 노인을 위한 양질의 포용적인 교육과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정부 부처, 시민사회단체, 청소년, 민간부문, 대학, 평생학습 제공자 등 모든 관련 핵심 행위자들과 더불어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다층적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학습 프로그램을 계획 · 설계 · 실행하기 위하여 지역학습센터 등과 같은 선도적 교육 기관들이 자격을 갖춘 성인 교육자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예산 제공을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서 평생학습을 지역 수준에서 강화해야 한다. 즉, 평생학습의 질 관리를 위해 대학 및 연구 기관들과 협력하여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고 급여 및 지위와 전문성 개발 등 교육자의 근무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성인 교육자의 직무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등 전문화하며 특화하는 정책과 전략을 시행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02 OECD의 지방 매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OECD(2022)는 지방을 떠나려는 주민을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매력도 향상을 통해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쇠퇴하는 지방의 매력도(Attractiveness)를 향상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했다. 교육, 의료, 복지 등 지역의 사회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지방의 인구가 대도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으로 원격 의료, 재택 근무의 확대 및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디지털 교육 촉진 강좌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른 근접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 지역위원회는 2018년 11월 지역이 젊고 숙련된 사람들을 유지하거나 다시 유치하기 위해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5개의 정책 권고 사항을 언급하였다. ① 지방 및 지역 당국이 유능한 젊은 인력 유출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하고, 관련 현황을 파악, ② 인재 기반 성장 전략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담당 기관을 결정하고, 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 필요, ③ 인재를 유지 · 유치하기 위한 주요 타깃팅 분야 및 부문을 명확히 결정, ④ 지자체가 인프라, 서비스 및 시설, 지역 및 문화 평판과 관련된 구조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 ⑤ 유능한 젊은 인재 유치는 타 지역 및 기관과 경쟁관계이므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 지역 및 기관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03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제5차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이 2022년 12월 발표되었다. 5차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 · 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확대, 둘째, 지자체 중심으로 대학, 기업 등과 지역 평생학습을 함께 진흥하여, 지역 정주여건 개선, 국가 균형발전, 지역소멸 방지에 일조, 셋째, 30~50대를 생애도약기로 지정하고 학습상담(컨설팅)부터 학습콘텐츠까지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평생학습 휴가 · 휴직제 도입 검토, 넷째, 사회부총리가 총괄 · 조정하는 국가-지자체-민간 평생학습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평생학습정책은 제1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02~2006)부터 중앙단위 평생교육체제 정립 및 지역평생교육 추진 체제를 통해 지역단위 평생교육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였다.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읍 · 면 · 동 단위 행복학습센터를 확대함으로서 '평생교육진흥원(시 · 도)-평생학습도시(시 · 군 · 구)-행복학습센터(읍 · 면 · 동)'로 이어지는 지역적 특성 및 평생학습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 밀착형 성인 평생학습 전달체계를 완성하였다. 또한 국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였고, 평생학습도시와 평생학습센터가 지정 · 운영되는 등 평생교육 추진체계가 구축되었다(교육부, 2018, 박성호 등(2020) 재인용).

제4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교육과정이 강화되면서 K-MOOC, 매치업 등 대학을 활용한 과정이 확대되고 지역 평생학습에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부터 추진된 대표적 평생교육정책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기반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였으나, 제4차 기본계획에서부터 대학이 전면적으로 부각하면서 지역평생학습에서 대학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제5차 기본계획은 지자체와 대학의 연계와 결합을 통한 강력한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 교육청, 대학 등은 서로 분절적으로 평생학습을 추진하면서 동일 지역 내 중복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역이 당면한 인구 문제, 산업구조의 변화 앞에서 지역의 모든 교육자원의 연계 · 협력방안이 절실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또한 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컸던 기존 추진체계에서 증가하는 직업교육 수요 등을 반영하여 대학, 산업을 연결하는 광역 중심 지역거버넌스 확대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및 산업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수준의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가 5차 계획에서 신설된다. 우수 평생학습도시 또는 특별 지원이 필요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여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선정 규모와 절차 등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지방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는 예산 지원 및 사업 추진시 장애가 되는 규제개선 등을 지원하게 된다.

Ⅳ 평생교육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과제

01 지역주도의 인재육성 실현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동력은 교육이며, 교육정책의 핵심은 지자체 권한 이양과 지방주도적 자율성이다. 올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도입되면서 이제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권한 일부를 2025년까지 지자체에 이양함에 따라 지역 교육 거버넌스와 지자체 교육 역할론이 재정비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는 줄이고 우려사항은 불식시키며

극복해야 한다. 평생학습 영역에서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 교육기관과 자원을 연계하는 거버넌스를 오랜 시간 잘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기초지자체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방대학을 활용하여 현재 지역이 당면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디지털 충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역수준의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와 대학이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매개로 광역 지방정부(지자체와 교육감)와 연계되고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포함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 공무원 및 전담기관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고등교육, 지역산업정책, 평생교육,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배치하거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역전문가들이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산업체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그간의 평생학습 전달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거버넌스의 성공방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

02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으로 거듭나는 지방대학

지방대학의 어려움은 무엇보다 학령인구의 급감에 있다. 그리고 지역의 많은 성인들은 재교육 또는 첨단화된 직업교육 등을 대학을 통해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학령기 학생 중심의 현재 대학체제를 재구조화하여 성인들이 학위, 비학위 과정을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방대학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학령기의 전일제 학생 위주에서 성인, 직업경험자의 재입학으로 시대에 맞게 대학은 유연한 학사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지난 6월 20일 발표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선정된 15개 혁신기획서에는 급격한 인구 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 산업계와 함께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고,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며, 교육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과감한 벽 허물기 등 다양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대다수 대학이 무학과 · 무학년 · 무전공 등 학문 · 학과 간 벽 허물기, 대학–지자체–연구소–기업 간 벽 허물기, 유학생 유치 등 국내 · 외 간 벽 허물기, 개방형 대학 거버넌스 혁신 등 기존 대학 운영의 공식을 혁파하는 과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연한 미래형 대학체제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경영이 어렵거나 폐교가 진행되는 지방대학은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폐교와 함께 뒤따르는 지역의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 정부는 대학 이전, 통 · 폐합 등으로 용도폐지되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유형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폐지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23.6.5.).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매입 또는 임대하여 대학이 지역사회 복지, 문화, 관광 등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실버산업 육성 등 산업혁신 거점으로 변화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03 지역인재 육성,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평생교육 체제 구축

지방대학 정책은 필연적으로 초중고 교육과 대입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졸업 후 지역 산업체 취업과 정주로 연계된다. 지방 주도 인재육성정책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가 돌봄과 사교육 걱정없이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지방대학에 진학하여 지역산업체에 취업한 후 정주하는 동안 필요한 재교육을 지역에서 계속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야말로 지역 주민을 평생동안 교육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교육청, 학교, 대학, 산업체를 연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형식(학교), 비형식(다양한 교육기관), 무형식 교육과정을 맞춤형으로 평생동안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교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현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지방자치 권한 강화와 지방대학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관련 예산과 규제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고, 지방에서는 정부 교육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면서 기회를 찾고 있다. 초중고 정책, 대학 정책, 청년정책, 평생학습 정책, 일자리 정책 등 모든 정책의 칸막이를 없애고 지역 주민 한명 한명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정책이 통합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모든 역량을 주민의 삶에 집중하여 평생학습 관점의 통합적 교육지원 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23), <지방대학 활성화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자료집.
- 교육부(2023a),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3.1.5.
- 교육부(2023b),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보도자료>, “지역혁심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및 시범지역 공모”, 2023.2.1.
- 박한우·박종문·김요한(2023),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박성호·김나영·김혜자·서재영·이쌍철·전현정·한효정·임숙경(2020), <증거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이행을 위한 국가교육지표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연덕원(2022), <위기의 지방대학, 원인과 해결방안>, 대학교육연구소.
- 통계청(2020), <2019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3), <대학 규제개선의 성과와 과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3.6.29.),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학혁신 지원 전략”, 부총리 특강.
- 한국사학진흥재단(2022), <2021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 분석보고서>.
- OECD(2022), 「Adapting Regional Policy in Korea」, Preparing Regions for Demographic Chang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4108660-en.
-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2022), 「CONFINTEA VII Marrakech Framework for Action: harnessing the transformational power of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 7th, Marrakech, Morocco, 2022, HamburgGermany, UIL.

DAEJEON SEJONG FORUM

정담(情談)

교육의 미래, 지역 대학에서 찾다

지역을 읽다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과 교수

/채순기
배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산학협력단 단장

/조현숙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LINC3.0사업단 부단장

대전·세종 FOCUS IN

/박명신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교수,
대전세종평생교육사협회 회장

/김미영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지역협력부장

/이희정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영기획팀장

지역 대학의 글로컬 30선정을 위한 혁신 방향

1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른 광역행정시대에 부응하는 국립대학의 혁신 방향 : 충청권역을 중심으로

최진혁 / 충남대학교 도시 · 자치융합과 교수

Ⅰ. 서론 : 문제제기

우리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1]와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인구구조 재편)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파급력은 지역대학의 소멸(존폐)위기론을 불러오게 하는 매우 위중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더구나 반세기 이상 대학진학이 인생의 부와 성공적 삶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었던 절대적 신화가 계속 진행될 것인가 의구심이 작용하는 시기에 대학은 더욱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대학은 과학기술 혁신에 따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무인자동차, 나노 · 바이오 기술 등이 일상화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하여 보다 새로운 지식의 창도 아래 미래의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그동안 보다 나은 교육, 일자리[2]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청년들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불균형적 성장을 이끌어 내었고, 이의 뒤안길에서 지역대학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가히 '한국적 병(la maladie coréenne ; korean disease)'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인력, 산업, 인프라 등에서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지역인구(지역인재) 유출 등은 지역거점국립대학의 존재 이유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연히 대학의 재정 악화로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 · 연구 · 봉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소진하여 교육혁신 등 자체적인 혁신동력 창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국립대학에 한정되었던 국가적 · 재정적 지원을 사립대학까지 확대하고 MB정부 이래 등록금 동결조치를 지속하면서 더욱 지역거점국립대학의 재정악화를 부추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3]

여기에 지방민주주의의 열매로서 재등장한 지난 30여 년의 지방자치의 소중한 경험은 정당이 관여하는 지방선거로 정치적 인사(지방자치단체장)를 선출하고 이들에 의해 자치(교육)행정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대학도 서서히 자치단체의 재정적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나 지원보다는 정치적 색깔로 대학을 재단할 수 있는, 즉 대학이 정치적 힘에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측면이 있다. 이는 정치적 중립에 의해 철저히 존중받아야 할 대학교육이 정치적 공간에 노출됨에 따라 대학이 가져야 하는 본질적 가치(자율성, 창의성)가 훼손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짐으로써, 특히 지역민(충청인)의 인재교육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탄생된 지역거점국립대학이 지역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이렇듯, 21세기 급변하는 환경과 그에 따른 엄중한 도전 앞에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거점국립대학의 전면적 혁신과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제시되고 있는 광역행정체제에 부응하는 국립대학을 포함한 지역거점국립대학의 혁신방향을 충청권역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지방정치·행정환경변화(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지역거점국립대학의 재설계

지역발전에서 국립대학의 역할은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다. 국립대학의 우수한 인적 · 물적 자원은 지역경제 · 산업 · 사회의 근간으로 작용하여 국립대학의 경쟁력이 지역사회 성장과 발전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지역거점국립대학이 우수한 교육, 연구역량을 지자체와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역거점국립대학은 그 설립 시기는 다르지만 1945년 해방 이후 40년대 후반과 50년대 전반에 걸쳐 지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각 지역거점(9개)[4]별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 충청권에는 두 개의 지역거점국립대학이 존재하는데, 이는 우리의 지방행정체제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로 구분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도)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충남, 충북을 대표하는 충남대학교와 충북대학교의 설립을 보게 된 것이다.[5]

그런데 그동안 지방정치 ·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행정서비스 공급 단위도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 농 분리)이 이루어졌

1) 2021년 8월 현재 전국의 고령인구비율은 16.9%이다. 충청권역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대전광역시는 15.0%, 세종특별자치시 10.0%인데 반해 충청남도는 19.6%, 충청북도는 18.6%이다.

2)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수도권 취업자 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이미 2017년부터 수도권 취업자 수의 증가현상이 비수도권에 비해 역전되어 나타난 시기임). 그에 따라 소득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수도권으로의 역전현상이 2015년을 기점으로 나타나게 됨. 수도권에 유입된 청년층의 수는 2015년 42,484명에서 2020년 89,841명으로 5년간 청년인구 2배에 달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22.4 보도자료).

3) 지역거점국립대학은 대학재정지표(학생 1인당 교육비, 세입 중 등록금 비율, 학생1인당 장학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산학연구부문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교내외 포함), 외국인 전임교원비율, 학부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비율 등)에서 사립대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한국도시행정학회, 2017).

4)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5) 충남대학교는 1952년 도립 충남대학교로 출발하였으며, 1962년 충북대학과 통합하여 국립충청대학교로 개편하였다가 1963년에 다시 분리되었다. 충북대학교는 1951년 도립 청주초급농과대학으로 개교하였고, 1956년 도립충북대학으로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도청소재지인 대전시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대도시(광역도시)로서 충남도에서 분리하여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직할시, 광역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충남지역인 공주시와 연기군, 일부 충북 오송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위를 받아 출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충청남도는 3개의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되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 되었고, 여기에 자연히 3개의 광역자치단체장이 각각 해당 지역의 주민선거에 의해 당선되는 각각 분리된 정치적 공간 속에 놓이게 되었다. 반면 충청북도는 도청소재지인 청주시가 도시화가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도시로 승격되지 못하고 그대로 충청북도 안의 도청소재지이며 기초자치단체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충북대학교와는 다르게 충남대학교는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고유한 교육업무(역할)에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대전, 세종이 분리되기 전 충남) 속에서 대학교육서비스도 행정서비스와 함께 통합적으로 관할되어 운영되어 왔던 것이 지방행정체제변화(도 · 농분리, 자치분권 균형발전도시 창설)라는 정치 · 행정적 변화 속에 거점국립대학 교육행정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혼란이었다. 즉, 대학교육행정은 지역교육청과는 별개로 교육부 관할의 업무로 존재하였음에도 국가가 일반행정과 대학행정을 조정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또한 대학 자체의 인식 부족에서 기존의 지역거점국립대학의 존재 이유를 망각케 하는 비효율적 행보를 보이게 하였던 이유이다.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충남이 3개의 자치단체(대전, 세종, 충남)로 분리되었다면 이에 대응한 지역거점국립대학의 대학교육행정체제도 합당하게 정리해 주었어야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발맞추어 충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충남권역 국립대학의 구조조정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면 대학교육을 책임지는 정부(교육부)로서는 기존의 일반행정구역과는 별도로 대학교육을 관장할 대학구(University district)를 조성해 지방정치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빈번한 지방행정구역개편의 영향에서 벗어나 본래 추구하려는 지위와 교육목표에 맞게 지역거점국립대학을 지역 발전의 중심축으로 유지 · 활용해야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교육의 소중함을 직시하여 지방자치와 더불어 교육자치제를 광역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즉, 초 · 중등교육은 교육청(교육집행기관)을 두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교육자치)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대학은 교육부(중앙정부) 중심의 관치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대학운영도 교육자치분권의 연장선상에서 그 패러다임을 교육부 중심에서 대학 중심으로, 지역민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여기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따른 광역권체제에 맞게 대학교육을 재설계해야 한다. 그런 배경에서 대학교육을 책임지는 광역권의 집행기관장으로 광역권 대학총장(Recteur/Chancelier)과 의결기관으로 대학교육협의회(가칭)를 두어 대학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부응하는 광역지방시대에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책무성 제고를 추진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견인해 내는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새롭게 재정립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III. 광역행정체제에 부응한 대학설계: 고등교육에 대한 도전과 변화

이렇듯 우리사회는 지난 30여 년의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연장선에서 또 다른 제2의 지방행정체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분절된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방식으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제 광역행정방식으로 충청권 메가리전(mega-region)를 통해 일반 및 교육행정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시대가 왔음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교통 · 통신수단의 발달, 경제권역의 확대, 과도한 수도권의 팽창 등으로 과거에 분리 · 운영되었던 대전 · 세종 · 충남 · 충북이 광역행정체제로서 서로 연계 · 협력하지 않으면 발전된 새로운 도시와 지역으로 진입해 가기가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 지역거점국립대학이 중앙정부와 기업, 연구소 등과 보다 영리(Intelligent)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인 지역혁신 거버넌스 체제(Regional innovation governance system)를 가동해 지역발전을 선도해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마치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NCSU)이 듀크대학(Duke University), 노스캐롤라이나대학(UNC)과 노스캐롤라이나주(Raleigh, Durham, Chapel Hill)정부와 금융권, 재계와 손잡고 기존의 농업(담배 · 섬유) 산업에 머물러 있던 낙후된 지역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생명공학의 중심지로 지역발전을 선도해냈던 것처럼 말이다. 거기에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첨단지식을 창출하고 배분하며 현실에 적용한 대학교육과 연구의 활성화 노력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지역발전의 핵심은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활동에서 나오는 자산에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경쟁력 있는 대학과 지자체가 기업, 연구소 등과의 활발한 협력체제로 지식에 기반한 연구활동과 산학협동을 진전시킬 수 있다면 자연히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고, 기업과 함께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런 배경에서 우리 충청권의 충남대학교는 충남도지역에 위치한 공주대와의 통합을 거쳐 충북대와의 연계 · 협력체제(통합)를 논의해야 할 이유가 있다. 2개의 지역거점국립대학을 인접한 지역의 국립대학과 연계 · 통합하여 그 안에서 3~4개 대학과 도시를 잇는 광역권체제의 성장거점지역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특히 공학계열은 카이스트(KAIST)와 연구역량을 공유하여 그 시너지효과를 거양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에서 이제 창조적인 대학(the creative university)으로 변화해야 한다. 과거 대학교육은 지식의 보존과 전달에 치중하였다면 이젠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쪽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려면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세분화된 학과체제 속에서 운영되는 학위프로그램이 학문간의 통섭 · 융합교육으로 프로그램화한 교육으로 학위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공계의 창의적 활동은 인문계와 사회계의 지식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고, 인문계나 사회계의 지식은 문화 · 예술계를 통해 더욱 창의적인 사고를 갖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배경에서 학생의 수요 및 진로를 반영한 학사구조 개편도 뒤따라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내에 한정된 교육에서 벗어나 해외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공동학위제 및 교수들의 공동연구를 장려해 국내외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촉면을 넓혀주어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처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책임질 수 있는 지역거점국립대학의 중추적 역할이 더 한층 강조되는 이유이다.

2 RISE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체-대학의 상생 플랜 -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

채순기 / 배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산학협력단 단장

대학은 수년째 급변하는 국내 · 외적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대학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진보는 사회 시스템 전반에 충격과 변화를 주고 있으며, 파괴적 기술에 의한 전 산업분야에서의 대대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특징적으로 초지능화, 초현실화, 초연결화라는 기술적 특징을 나타내며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COVID-19의 팬더믹 시기를 거치면서 디지털시대가 더욱 급속히 다가왔으며 ChatGPT 등 AI를 활용한 기술의 혁신은 대학교육 방법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대학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년 지속되는 학령인구의 감소이며 이는 대학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신규 입학생의 감소는 학과 구조조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학평가에서 입학 충원률 지표값이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어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학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구조조정을 통해 학과를 없애거나, 유사학과끼리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 학부생들의 재학률 저하도 대학재정에 이중으로 큰 손실을 주고 있다. 예전에 비해 수도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짐에 따라 재수를 위해 자퇴를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미 지역 대학은 이러한 원인에 따른 재정 압박으로 인해 유능한 신임교수의 임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연구나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시설보완 및 기기 장비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러 면에서 대학의 위기 탈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지방 대학의 소멸은 해당 대학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의 경제, 교육, 산업, 인구 등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히 지역 산업체들은 인력 수급이 어려워져 향후 지역을 떠날 것이다. 지자체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학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력산업의 인력양성과 청년인재를 지역에 정주시켜 산업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 · 산 · 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현 정부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지역과 대학 간의 연계 · 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대학 · 지자체 · 산업 간 협력으로 지역위기 극복 및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 중앙정부의 대학지원 행 · 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위임 · 이양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인 일명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도 견인할 수 있는 특화분야를 강화하며 세계적인 대학을 육성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야흐로 고등교육의 지방시대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지방시대를 위한 과제는 대학이 지자체와 산업체, 주민 등 지역사회와의 긍정적인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의 혁신 발전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학교와 지역 기업, 지자체, 사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지 · 산 · 학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여 지역의 요구와 산업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대학은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지역 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제공하며, 연구와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상업화, 지식공유와 확산 등을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RISE 사업은 "지역인재양성-취 · 창업-정주"라는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 대학의 규제 완화를 전략으로 삼아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대학이 살리는 지역) 및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RISE 시범지역으로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나, 아쉽게도 대전은 선정되지 못하였다.

RISE 체계 구축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RISE에 대한 지자체의 준비와 의지는 사업 선정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시장의 공약사업인 지 · 산 · 학 협력 프로젝트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이미 2021년 8월에 부산테크노파크에 지산학협력센터를 설립하였다. 2022년에는 지방비 약 4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 · 산 · 학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본격 구축하였다. 휴스타(HuStar) 프로젝트는 대구광역시와 대구테크노파크가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출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한 미래신성장 산업 분야의 기업수요 맞춤형 혁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에는 경남 RISE 센터가 창원의 경남연구원에서 전국 7개소 RISE 시범지역 중 처음으로 출범하였다. 대전광역시는 2024년 초 RISE 센터 출범을 목표로 하고 RISE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 · 산 · 학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대학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학이 위기에서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업으로 인식되어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원을 하였고 지난 6월 15개 대학이 예비선정되었다. 대전 지역에는 RISE 사업에 이어 글로컬30 사업에도 예비 선정된 대학이 없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지원한 대학들의 혁신계획서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원을 위해 지역에서도 충남대와 한밭대의 통합이 추진되었으며, 대전대-한남대는 대전 주력산업과 연계된 학과를 연합대학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목원대-배재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법인이 다른 4년제 사립대 간의 통합을 전제로 한 단일 계획서를 제출해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목원대-배재대는 첨단전략캠퍼스-혁신캠퍼스-글로벌캠퍼스를 신설하고 캠퍼스 부총장이 세부 사업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도록 하였다. 첨단전략캠퍼스는 대덕 테크노밸리 산단에 위치한 산업단지캠퍼스에 지역 주력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기업정주형 체제의 통합대학을 운영하며, 혁신캠퍼스에는 교양대학, 유사 · 공통 전공학과, 평생교육대학의 통합 운영을, 글로벌캠퍼스는 유학생 정주형 캠퍼스 혁신타운을 구축하고 나아가 해외 글로벌 캠퍼스 공동경영으로 글로벌 교육성과를 극대화하는 통합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목원대-배재대 통합 전략은 대학의 절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두 대학의 인적, 시설 · 장비, 공간의 공유와 공통 단과대학의 통합 운영을 통하여 재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통합 후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어 개인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학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역 RISE 체계와 연계한 첨단캠퍼스에서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창출될 것이며 더 큰 인프라와 연구 능력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학 간 조직 문화 및 관리체제의 간극과 각자의 독특한 학문 문화차이 극복, 학교 운영에 대한 접근 방식 및 철학 등의 차이 조정, 구성원들 간의 조화로운 협력이 통합에 남은 과제라 할 수 있다.

대학은 지역 경제 · 산업 · 사회 · 문화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적 · 물적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와 직결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방 대학들 대부분은 이미 재정위기의 악순환 고리에 진입하기 직전이며 대학들 간의 무한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의 대학은 각자 구조조정 및 특성화를 통해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기가 쉬워 보이진 않는다.

대전광역시는 청년인재의 지역정주 유도와 지역기업으로의 취업 촉진을 위한 청년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지형의 유례없는 변화와 수도권으로의 집중으로 인해 대전 청년인재의 유출을 막고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을 꾸준히 발전시키기에는 지역 차원의 노력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미흡하다는 생각을 떨쳐내기 어렵다.

RISE 체계 하에 대학에서 육성할 예비 취업자들의 지역 산업체 현장실습은 우수인력의 수도권 이탈을 낮추고 지역 산업체로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을 쌓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무 역량 강화, 학문과 실무 연결, 실제 업계 경험, 전문성 개발, 취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다. 지역 기업과 학생매칭을 통한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연계되면 기업은 숙련된 우수인력의 확보와 인력난 해소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대학은 주요 지표인 취업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배재대 현장실습지원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현장실습을 수행한 학생의 취업률이 일반 졸업생의 취업률에 비해 매년 1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장실습은 2021년 9월부터는 교육부 고시 제2021호-19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라 기업은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비로 지불해야 하며, 이 경우에만 학생은 "표준현장실습" 참여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열정페이 현실화"로 촉발된 표준현장실습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대학에서는 참여기업을 모집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학생들은 표준현장실습에 참여하길 원하지만 참여기업의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센터의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지원사업"은 지역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자체 예산으로 실습생의 최저임금의 약 50%를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가 시행한 것으로 표준현장실습과 연계하여 매년 400명 규모의 실습생을 모집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도 2018년부터 청년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일경험 참여학생들에게 직접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대전형코업청년뉴리더 양성사업"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표준현장실습"에 해당되지 못함으로써 기업의 산학마일리지 적립이나 대학 공시지표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대전시의 청년인턴지원 사업은 미취업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기업에 취업 시 최저임금의 약 84%를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표준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졸업 전 우수인재의 기업 선점과 수도권 이탈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각 사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취업연계가 약한 대전형코업청년뉴리더 양성사업이나 청년인턴지원 사업보다는 부산의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지원사업"과 같은 지역 주력산업의 표준현장실습 확대를 위한 기업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것 같다는 제안이다.

힘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0년 뒤에는 대학 입학자원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지방 대학들 대부분이 심각한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학들은 이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하여 해외 유학생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개별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 기업들과의 취업을 연계한 유학생 유치 또는 재학 중 일정시간의 일허락, 해외 유학생 정주 지원 등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유학생 유치 정책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고등교육의 지방시대를 맞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한 RISE 체계의 구축이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자체는 신속히 RISE 센터를 설립하여 주력산업의 인력양성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더불어 지역 혁신과 직결되는 지자체 자체의 지 · 산 · 학 협력 프로그램을 기획 ·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현재 각 대학별로 진행되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지자체 주도적인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 · 산 · 학 협력 생태계가 더욱 구체화되고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의 역할도 이전의 지식공장(Knowledge Factory)에서 참여적 대학(Engaged University)으로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지 · 산 · 학 협력과 활성화는 이제 지방대학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실행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지역 상생 파트너십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3 글로컬대학으로 갈 수 있는 준비된 대학, 대전대학교!

조현숙 /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LINC3.0사업단 부단장

I. '지방대의 반란' 대전대, 아세안특화대 거듭나다!

대전대학교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한 · 아세안 학생교환프로그램(International College Student Exchange Program between Korea and ASEAN Nations)'을 운영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 지원을 통해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ASEAN 산하 10개국의 학생들에게 첨단 교육기회를 제공했다. 한국 정부와 아세안 간에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마련하여 소속 10개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였고, 방학 중 원자력국제협력재단,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대덕이노폴리스 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인턴십을 추진하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09년부터 사업의 방향을 사회과학 분야에서 IT 분야로 변경하면서 UNAPCICT(UN 정보통신기술 아시아 · 태평양훈련센터)와 프로그램을 공조하며 명실상부 한–아세안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아쉽게도 외교부의 신남방정책 선언으로 본 사업은 종료하게 되었으나 대한민국 대표 대학국제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고 아세안 미래 지도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한–아세안 제5회 동문회 |

대전대학교 '한–아세안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한 · 중 · 일을 포함한 ASEAN+3 사업으로 확장되었으며, 이어 아프리카 교환학생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2011년 에티오피아 유학생 '칼레다위트 에스멜레알렘'과 베트남 유학생 '형호앙 쑤안'이 국제개발협력학회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라디오폰을 발표하였다. 이 라디오폰 개발 시작점은 당시 대전대학교에서 수업으로 진행한 '리서치 프로젝트'였다. 에티오피아 유학생은 아프리카에서는 IBM이나 MIT가 개발한 저개발 국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기에는 통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비용이 비싸 효용성이 없는 점에 착안해 아이디어를 냈다. 그들은 베트남 유학생과 협업하여 별도의 기지국과 전력 공급이 없어도 사용가능한 라디오폰을 만들었다. 이 모든 일은 한 학기만에 이루어낸 성과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무하마드 파즈린 라시드'는 반둥공대 출신으로 중소기업체의 제품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쇼핑몰이 성공하여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부칼라팍' 공동창업자가 되었다. 부칼라팍은 2021년 8월 인도네시아 유니콘 기업 중 최초로 인도네시아 증시에 상장, 2023년 현재 40조 5,000억 루피아(약 27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한–아세안 협력사업을 심사했던 한 전문관은 대전대학교 한–아세안 프로그램을 "지방대의 반란 대전대, 아세안특화대 거듭나다!"라는 제목으로 2021년 기사화했다. 대전대학교는 교육부가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으로 기업과의 협업을 강조하기 훨씬 이전부터 아세안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인턴십을 통해 현장 실무를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대전대 유학생들은 아세안 각국의 공무원, 교수, 스타트업 CEO 등 매년 20명이 넘는 인원이 15년간 대전대학교에서 수학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각국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로 성장하였다.

II. 대전대학교, LINC3.0 충청권 최우수대학 선정!

대전대학교는 1단계 LINC 사업에서 이공계(BIT) 중심의 산학협력을 확장하여 창의성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계열과 함께하는 문화융합형(Culture & Convergence)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제시하였고 한방바이오, ICT, 문화융합비즈니스 특화 인력양성에 주력하였다. 2017년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2단계 링크사업인 LINC+ 에서는 기존에 대학이 주도하던 단방향 산학협력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및 가족회사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3–Way(지역↔대학↔기업) 산학협력으로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화 추진이 가능한 산학협력 전략 수단 및 방향을 도출하고 설정하였다.

3단계 링크사업에서는 기존 보유 인프라, 역량기반 지역산업과 국가 첨단분야를 연계하여 한방바이오헬스, 환경안전, 문화디자인, 모빌리티 융합을 산학협력 특화 분야로 선정하였다. 사업선정 후 한방바이오헬스 분야는 디지털 융합 한방바이오 ICC와 AI 헬스케어 ICC로 세분화하였고, 환경안전 분야는 디지털 융합 환경안전 ICC, 문화디자인 분야는 문화 디자인기술 ICC로 설정, 모빌리티 융합 ICC는 DSC 지역혁신사업(RIS)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전대학교는 2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기간부터 이미 지역과 함께하는 공유협업을 실천해왔으며, 10년 이상의 산학협력 사업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상생과 대학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3단계 1차년도 성과평가에서 충청권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III. 대전을 아세안 경제협력허브 도시로 만들 브릿지,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는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사업계획서를 통해 '첨단 과학예술 경제도시','웰빙/웰페어 산업혁신도시'를 지향하는 글로컬 SSAC(local-based Sustainable, Scitech & K-medibio, digital-based Arts, Culture) 인재 양성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역기반 지속가능성, 과학기술과 한방바이오, 첨단예술과 문화라는 4대 분야 인력양성을 통해 대전을 세계적 일류 도시로 만들고 대학과 동반성장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고를 통해 대전대학교의 글로컬 방향을 소개하고 대전광역시가 산업계와 동반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혁신전략 #1
창의융합 SSAC 인재양성 체계 구축

제1전략은 글로컬 TIUM(티움) 칼리지를 설립하여 '산업기반 인력 채용형 소단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신산업 기반 모듈 교육을 통해 창직 및 창업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생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입학 과정에서 지역 공공기관 및 연구소 등과 졸업 후 취업, 지역 정주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대전 · 세종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대학별 주력 산업분야를 구분하여 지자체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혁신전략 #2
창의융합 Super HERO 지역정주 인력양성

*(*HERO higher entrepreneurship open innovation)*

제2전략은 '창직개발연구재단'을 설립하여 대전의 창직 · 창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아세안을 비롯한 각국의 적정기술 R&D, 관련 산업분야 창직, 사업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정주 첨단문화예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략적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등 대전형 일자리창출 전략을 계획하였다. 또한 대전시립기업(대전광역시가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기업군-대전대 명명 가칭)을 발굴하여 D-유니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와 대학이 함께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혁신전략 #3
한-아세안 경제협력 허브도시 구축

제3전략은 15년간의 한-아세안 사업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대전광역시와 아세안 각국의 도시 간 경제협력 허브를 구축하고, 아세안 대학연합 소속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학부-대학원 통합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아세안 경제특구 조성 도시 간 인재 정주에 관한 협약을 통해 한국의 K-culture, K-medibio 등을 세계로 확산하고 대전이 초일류 경제도시로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혁신전략 #4
디지털기반 K-MediBio 전략산업 선도

마지막 제4전략은 지산학연병 한방바이오 특화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R&D 성과를 기술사업화하고, 한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디지털한의학 융복합 학부 신설, 웰빙/웰페어 헬스케어 산업인력 양성 및 산업 체계 구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은 충북 오송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대전대학교는 충북 오송의 바이오첨단 분야 협업을 통해 하이테크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 한의학과를 선두로 한방바이오 식품연구, 화장품연구 등 한의학과 바이오산업 융합 선두 주자로 기술개발 및 창업의 메카로 자리잡아 아세안을 시작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대학교를 비롯한 대전광역시 내 모든 대학이 이번 글로컬대학 15곳 예비지정에서 탈락했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반성과 자각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전광역시와 협력하여 지역을 살릴 대학으로 각 대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비지정에서 선정된 대학 중 단연 눈에 띄는 강원도는 정부의 지역주도 대학지원체계 전환에 맞춰 대학에 5년간 1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 사업 4곳이 예비선정된 경상북도 도지사가 글로컬 최종 선정 대학에 한하여 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데 비해 강원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해 산학협력 기반 구축 4,895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5,650억 원, 글로컬대학 육성 2,500억 원, 그리고 미래산업 및 앵커기업 육성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이라는 항목으로 글로컬대학 미지정 대학의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대학 육성 지원금의 2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한다는 사실이다.

대학은 지역의 핵심기관이다. 지역의 경제, 문화, 인구분포까지 좌우할 수 있는 핵심 키가 대학에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의 자연스러운 소멸을 초래했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 여부에 따라 소멸 위기의 대학과 지역을 살릴 기회라 할 수 있다. 타 지역 대학이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한다면 대전지역 대학이 부자연스럽게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대전 내 모든 대학과 대전광역시는 긴말한 협력과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계획을 통해 상생발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전력투구해야 할 때이다.

대전대학교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한의학과 접목하여 대전광역시 신산업군을 육성하고, 아세안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창업 및 창직교육을 통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 본사, 아세안 각국에 지사를 운영하는 인력양성을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산학협력의 꽃을 피울 계획이다. 또한 LINC(산학협력선도대학)3.0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 지역사회 공유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3대 전략수단인 '신개념 적정기술', '3-Way 리빙랩', '디지털전환'을 활용하여 대학, 기업,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을 창출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특히, 적정기술 사업화를 통해 몽골, 아프리카 등 저개발도상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대전대학교는 대전광역시를 혁신도시로, 세계수준의 글로벌 도시로 만들 협업 대학으로 나아갈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내년에는 대전광역시에서 3개 대학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를 기대해본다.

남궁영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 최선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 박명신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교수, 대전세종평생교육사협회 회장

RISE 체계와 평생교육 학습자들의 수준 향상에 따른 지역평생교육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과 연계한 평생교육 활성화 분야에 있어 평생교육이 갖는 위상과 비중은 매우 낮게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다. 현 정부는 지자체 중심의 평생교육 및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강화 분야에서 평생교육이 매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대학에서 진행했던 평생교육 사업인 하이브(HIV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라이프(LIFE: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사업 등을 2025년부터 라이즈(RISE: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구축 사업)로 통합해 평생교육의 역할이 확대될 예정이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최선희 원장,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남궁영 원장과 함께 뜨거운 이슈인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라이즈사업과 관련된 지역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교육 학습자들의 수준 향상에 따른 지역평생교육 방안을 찾아보았다.

박명신

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 교수이면서 대전세종평생교육사협회 회장인 박명신입니다.

대전의 경우 2001년 유성구가 초창기 평생학습도시로 시작하여 2011년 평생교육진흥원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출범하였으며, 세종의 경우는 2016년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하여 지역에서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최선희 원장님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남궁영 원장님을 모시고 현재 국가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라이즈 사업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RISE사업에 대한 평생교육의 입장

박명신

현재 국가 차원에서 교육부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지방 소재 지역대학 30곳을 뽑아 5년간 1,000억 원씩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대학을 선발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각 대학들은 교육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마련을 위해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과 대학 그리고 산업과의 연계,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는 평생교육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역과 대학, 산업의 연계와 협력이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선희

대전평생교육진흥원도 현재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역과 대학의 연계에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원 측에서는 대학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떠맡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곤란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원래 커다란 틀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던 것을 지자체와 동반성장하는 그림이지만, 마냥 좋은 부분만 있을 순 없다는 것이죠.

남궁영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9월에 자체 정책포럼을 개최하는데 라이즈 사업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라이즈사업을 우리가 맡아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최선희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직접 대학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 사업들입니다. 말씀하신 바처럼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체계인 RISE는 지역과 대학의 대혁신을 이끌어내야 할 과제가 있기에 성급하지도 미루지도 말고 중차대한 지역 내 과업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대학을 지원해나가다 보면 지역의 평생교육과 합쳐지는 큰 그림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궁영

그동안 평생교육은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취미 교양 교육정도로 시민들에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대학과 연계한 평생교육 활성화 분야에 있어 평생교육이 갖는 위상과 비중은 매우

낮게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지자체 중심의 평생교육 및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강화 분야에 평생교육이 매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학 평생교육 사업은 하이브(HIV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라이프(LIFE: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사업 등이 진행되어 왔으나, 2025년부터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구축 사업)로 통합될 예정으로 평생교육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이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산업 연계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중간조직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특히, 교육 기반의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대학, 산업체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의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즈사업의 일환으로 광역 지자체에 설치된 라이즈센터의 중심 역할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박명신

교육적 이해도와 네트워크 역할에 있어 경험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라이즈센터를 운영하게 될텐데 현재 라이즈사업을 관리하는 우리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선정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선희

아직 라이즈에 대해 결정해야 할 많은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모든 지역이 RISE를 위한 대학지원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시청 내 전담부서 설치, 전담기관(RISE 센터) 지정 및 설치, 지역고등교육협의회(가칭) 신설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이러한 조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가운에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있다면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남궁영

세종 지역에도 대학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역할을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 허브 역할을 수행한 기관으로 평생교육 네트워크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교육 전문성과 직업능력 향상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대학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분야의 인재를 양성해 왔으며, 협력관계에 있어서도 폭넓은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경쟁력은 튼튼한 교육기반과 다양하고 긴밀한 네트워크 체제에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단순한 산업인력 양성과 취 · 창업 등의 일차원적 접근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부합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지역 대학과 협력하고 다양한 지역 산업체와 연계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며, 이러한 역할을 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신

대학 또한 대대적으로 회의를 통해 지역과 어떻게 평생교육을 연계하고 협력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잘 살기 위해서는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원이 플랫폼이 되어 즉 지역과 대학, 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평생교육을 제대로 만들어가자, 앞으로 대학의 고급자원이나 전문인력 등 학교가 갖고 있는 각종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평생교육이 국가 주도가 아닌 지자체 주도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대학과 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인 학습자들의 욕구 충족 방안

박명신

평생교육법은 1982년 사회교육법으로 시작하여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었고, 지금까지 40여 년을 국가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고등학력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활발하게 평생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평생학습 체험과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사실 타 지역보다 대전과 세종의 학습자들 수준과 학력이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평생학습을 지속하면서 한 층 더 학습자들의 수준이 향상된 것을 느낍니다.

학습자들의 수준이 높아진 덕분에 요즘 개설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이들의 학습욕구 충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평생교육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습자들의 욕구를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현장의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궁영

저는 그래서 평생교육이 대학들과 더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생교육을 지역 내 시민들에게 재능기부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시민들 중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분들이 강좌를 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자와 교육생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이죠. 한 번씩 대학 교수가 와서 강좌를 진행하면 교육생들의 태도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민 강사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 교수들이 평생교육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희

평생교육 초반에는 양적인 확장에 집중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질적인 향상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법이 2007년에 전부 개정되면서, 국가-광역-기초-읍면동까지 공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턱없이 부족하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대전의 경우 기초 단위인 유성구, 대덕구, 서구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였고, 유성구가 2001년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 이어 순차적으로 대덕구(2007), 동구(2012), 서구(2013)가 지정받았습니다. 광역단위에서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2011년 전국 최초 독립법인 형태로 설립하였고, 2013년 전국 최대 규모의 대전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대전 시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갈증이 어느정도 채워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한때 대전시민대학은 한학기에 1,260여 강좌, 1년에 5,000여 강좌를 운영하여 18,000명의 대전 시민이 매주 방문하여 평생학습하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치구와 진흥원

에서 언제나 참여 가능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13년째 제공해 오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강좌는 사라지고 꾸준히 질적 향상을 해온 강좌는 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학습자의 수준과 강사의 수준이 동반성장해 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평생학습을 통해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강사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 교수법, 소통하는 방법 등 다양한 연수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발적 학습동아리, 학습축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학습요구 범위가 넓어져서 양적, 질적으로 공급자의 일방적인 제공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시민의 학습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학습역량, 강사의 교육역량, 기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 운영 역량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진흥원에서도 이러한 역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세밀히 살피고, 더 고민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정책을 제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영

시민들의 학습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어야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기반으로 미래인재가 될 아이부터 평생학습의 열정을 지닌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재 개발뿐만 아니라 고등학력 수준의 전문교육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을 고등교육 학력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전문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평생교육에서의 추진 방향 및 사업 (프로젝트)

박명신

수준 높은 학습자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고급화, 단계화, 전문화를 위해 지역 평생교육의 추진 방향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최선희

시민학습자의 수준이 평생학습을 하면서 더욱 성숙해졌고,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이에 발맞추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전국에서 최대 규모이면서 단일 최대 규모의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시민대학의 경우, 시민 생활권으로 다가가는 권역별 캠퍼스를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덕대학교, 자치구 평생학습원, 행정복지센터 6개 캠퍼스를 선정하여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여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둘째, 마을시민대학은 생활을 함께하는 지역주민들이 머리를 맞대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7개 마을시민대학으로 시작하여 2023년에는 10개로 확장되었습니다. 각 사업은 마을공동체, 기후환경 등 공공성 프로그램 2개와 주민희망 프로그램 1개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작은도서관 마을시민대학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스마트폰 활용, 책으로 만나는 인문학, 나를 찾아 떠나는 마음여행 프로그램을 5~11월까지 운영하여 1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습역량이 강화되고, 생활근거지가 같은 시민들이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학습공동체가 형성되어 자발적인 학습모임으로 연결되면서 학습 후 학습모임

과 사회참여로의 선순환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대전온배움이 있습니다. 대전온배움의 누구나 강사, 우리동네 명강사 코너에는 대전 전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의 특강이 있고, IT/컴퓨터, 자격증, 직업준비, 외국어, 인문교양, 취미여가, 심리소통, 학력보완 등 470여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2024년에는 대학연계 콘텐츠를 시범적으로 개발 ·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궁영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수준 높은 학습 요구도에 맞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고급화, 단계화, 전문화를 위해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은 세종특별자치시 평생학습의 대표 브랜드로서 세종 시민이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을 통해 '앎이 있는 삶, 삶 속의 앎, 함께하는 앎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학습 시스템입니다. 교육운영체계를 살펴보면 권역별 학당, 대학연계 학당 그리고 기관연계 학당에서 특성화 강좌를 운영하고 학점을 관리하여 학사관리 시스템에 학습 이력을 담아 명예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권역별 학당은 진흥원 본부와 시청 그리고 3개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6대 분야 즉 정책교육, 시민교육, 인문교육, 문화예술교육, 실용교육, 미래교육의 세부강좌가 연간 3학기(상반기, 계절학기, 하반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아카데미는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의 모태가 된 대표적인 정책교육 강좌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300회 이상 운영되었으며, 주요정책 및 시정 현안에 대해 시민, 공무원의 소통,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한 단계 발전하여 「미래전략아카데미」로 개편되어 시민이 직접 말하는 정책의제를 도출하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미래정책 제안을 통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교육은 2016년부터 특강형으로 운영되었던 문 · 사 · 철 중심의 인문학적 테마별 강좌를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의 재창조 시스템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정규 강좌로 기획 ·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연계 학당은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세종시민에게 고급화, 전문화된 강좌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연합교양대학은 2017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있는 고려대, 홍익대 세종캠퍼스와 협업하여 대학생과 시민이 함께 '세종의 재발견' 강좌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알 수 있는 지역학을 배우는 학습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적인 강좌(단청, 전각, 배첩 등)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영상대는 세종시 특화 직업, 창업 전문교육을 위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연계로 수강료와 재료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관연계 학당은 각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 강좌의 명예학위 학점으로 9개 기관(세종여성플라자, 고려대학교 세종국어문화원,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 세종특별자치시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수한 학점 이력으로 연계하여 관리 · 운영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학위제는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에서 운영되는 권역별 학당, 대학연계 학당, 기관연계 학당에서 이수한 강좌를 학사관리시스템에 학점으로 연계하여 진흥원 이사장(시장)명의 명예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임학사(학사)', '부제학(석사)', '대제학(박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100시간, 200시간, 365시간을 이수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2년 1월 1회 명예학위수여식을 통해 전임학사 48명 배출에 이어 '23년 2월 제2회는 전임학사(학사) 72명, 첫 번째 부제학(석사) 9명을 배출하였으며 '24년 2월에는 첫 번째 대제학(박사)을 배출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의 핵심인력 (평생교육사, 강사)의 역량 진흥

박명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고급화, 단계화, 전문화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및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생교육 현장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와 강사의 역량 및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들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량을 갖추고, 고급화 · 단계화 · 전문화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 발굴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고급화 · 단계화 · 전문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최선희

교육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에서도 예외 없이 강사의 수준만큼 평생교육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는 매년 대전에서 활동하는 평생교육 핵심인력의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평생교육 강사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총 12회의 연수를 기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수법, 학습자 이해, 커뮤니티 등이 5월, 7월에 운영되었으며 550명이 참석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자치구와 연계한 학습동아리 리더, 학습매니저 등 평생교육 실천가를 대상으로 총 12회 교육도 기획하였습니다. 내용은 비주얼 씽킹을 이용한 평생학습 축제 기획, 평생학습 상담 등으로 3월부터 연중 운영됩니다. 현재까지 6회 운영되었으며 약 9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를 대상으로 8월에 6회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평생교육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합니다. 앞으로도 국정과제, 시정과제, 미래 트렌드에 발맞추는 평생교육 핵심인력 양성교육을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수로 준비하겠습니다.

남궁영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는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 및 평생교육 현장의 질 관리 시스템을 정교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생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와 평생교육 교 · 강사에 대한 질 관리 체계는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평생교육사의 경우 평생교육 관련 교과를 30학점 이수하고, 160여 시간의 실습을 통해 국가 단위에서 인력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와 재교육은 정례화,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물론 1,2,3급의 자격연수 과정이 국가 단위에서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의무과정이 아니며 연수비용 역시 연수 참여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평생교육 현장의 평생교육사에게 자격 갱신을 위한 연수를 의무화하고, 연수 참여비용에 대해 재직기관 및 단체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5차 국가 평생교육진흥계획 내 학습휴가제와 연동하여 시행하면, 그동안 제도적 장치로만 규정된 학습휴가제가 비로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사 자격연수(승급과정) 및 재교육에 대한 권한을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위임하여 지역 내 근거리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평생교육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 봅니다. 평생교육 현장의 질적 제고를 위한 또 다른 축인 평생교육 교 · 강사의 질적 강화 문제는 교 · 강사 연수체계 재정비 문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현재,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평생교육진흥원과 시 · 군 · 구 평생학습관 등에서 지역 내 평생교육 교 · 강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 연수체계는 연수의 체계성과 정기성,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부분에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평생교육 교 · 강사의 연수 참여동기 부족 문제입니다. 이는 연수 참여시 교 · 강사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연수 참여 후에 교 · 강사 활동 등과 연계한 메리트 부분이 없어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평생교육 교 · 강사 연수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교 · 강사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필수역량(강사, 소양, 정책동향 이해, 교수법 등)과 더불어 교 · 강사 활동 영역의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역량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택 역량의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문해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분야에 있어 필요로 하는 강사 전문성과 학습자 이해 역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는 11월 중 완료 예정으로 '24년도부터 우선 시범운영하여 개선점을 보완한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수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연수과정 이수생을 대상으로 이수 수준에 따라 차등적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명신

지금까지 대전과 세종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두 원장님을 한 자리에 모시고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혁신에 대한 라이즈사업과 평생교육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서 의논하여 어떤 것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계속 논의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 단계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 시민이 행복한 평생교육 도시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두 분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소개

김미영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지역협력부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0조(시 · 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에 따라 대전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출연하여 2011년 설립된 전국 최초의 독립법인이다. 평생교육법에서는 진흥원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 · 군 · 구 간 협력 · 연계 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설립 12년차가 된 전국 평생교육의 1번지라고 자부한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Daejeon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상징 마크는 무엇이든 가능한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 열린 문을 형상화하였다.

열린 문은 열린 지식과 플랫폼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으며, 플랫폼은 다양한 지식이 모이고 확산되고 교류되어 감을 의미한다.

시민의 삶이 윤택하고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비전을 반영하였다.

주 요 사 업

1 전국 최초, 최대 규모의 대전시민대학은 3세에서 80세 시민이 언제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중 일과 시간, 야간, 주말까지 열려 있다. 운영 규모, 교육 내용, 참여 시민학습자 수에 매년 변화가 있지만 지금도 전국 최대 규모의 단일 평생교육시설이다.

2 전국 최초, 찾아가는 가장 친절한 배달강좌제는 학습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습소외계층 5인이 모인 장소를 교실로 삼아 강사가 직접 방문하는 평생학습이 이루어진다.

3 온라인 평생학습 포털 대전온배움은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넘어 언제 어디서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온라인 학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방법도 실시간 온라인 학습, 동영상 강의 등 다채로워짐에 따라 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4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과 강사들의 역량이 꾸준히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하여 지역 주민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대전에서 활동하는 약 2,000명의 평생교육 강사들에게 학습자 이해, 교수법, 소통법, 마음읽기 등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 각자의 사연으로 제때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이 초등학력 인정, 중등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교실에서 1년 학습하면 초등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대전 시립 중고등학교에서 각기 2년 학습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6 진흥원의 기능 중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중요한 지원 활동들도 하고 있다. 대전에 소재한 900여 평생교육기관들이 상시로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전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모아 정보망도 운영하고 있다. 대전 평생교육의 싱크탱크로서 주기적 조사를 통한 정보의 과학화를 지원하고 있고 시의 적절한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평생교육 전문가와 관계자의 지식나눔을 위한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앞으로도 한결같이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시민 평생교육을 제대로 진흥하기 위하여 먼저 학습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시민 누구나 과거를 추억하는 감사학습, 현재를 누리는 기쁨학습,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매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개

이희정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영기획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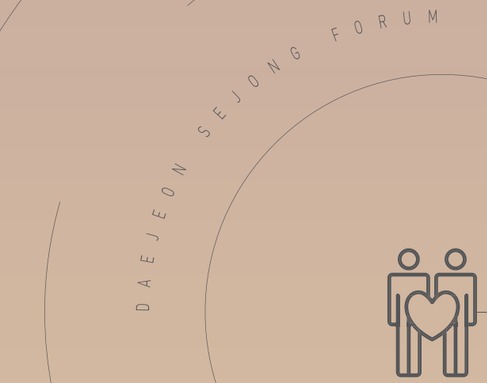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세종평진원)은 연기군 장학회(인재육성재단)와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이 2018년 통합하여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9년 평생학습도시로, 2020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2022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펼쳐진 책의 모습이 사람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인재 육성과 평생교육의 두가지 주요 사업을 아우르는 기관의 비전을 의미한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의 배움과 성장, 더 나은 일상을 위해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우리 삶터를 가꾸고 있다. 먼저 앎이 삶이 되도록「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통해 세종 시민만의 학당체계로 세종특별자치시 곳곳을 시민대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비사업으로 받아 복합문해센터, 장애인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세종배움터, 읍면평생학습센터, 공유학습공간 등을 촘촘하게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로 배움의 뜻이 있다면 어디든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세종e채널(유튜브), 평생교육정보망, 세종e배움터, 세종집현전(LMS) 등 온라인 학습의 장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연구 및 포럼, 컨설팅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지역인재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는 인재육성 사업을 하고 있다. 먼저 저소득계층이나 학자금대출자, 장애학생, 다문화 가정자녀, 학교 밖 청소년 등 지역 아동 · 청소년 · 청년 모두가 소외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청년의 도전과 열정에 힘을 보태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직종의 현직자(멘토)와 연계한 멘토링 활동과 청년의 자기계발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희망배움터 사업이 있다. 세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을 위해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동아리가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으로 재능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는 옹기종기 세종사람들 사업이 있다. 마지막으로 구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종평진원 장학금 수혜자와 지역 청년 자원봉사자가 읍 · 면 지역의 세종 꿈 나눔터 지정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펼친다.



연구원 이모저모

DSI NEWS

/연구원 뉴스

연 구 원 N E W S

2023 정책엑스포 개최

6월 7일(수)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일류경제도시 · 대덕특구 50주년 · 대전엑스포 30주년'을 기념하는 2023 정책엑스포를 개최하였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대전과 대덕의 협력을 통한 일류경제도시 대전 미래비전'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고 공간, 문화, 과학경제, 사람으로 나눈 총 4개의 세션에서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대전 도시공간 변화와 미래상', '그 시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30~50대 과학 · 문화 · 관광인', '대덕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조성', '여성 · 은퇴과학자 · 50년간 대덕을 지켜온 과학자들' 등의 소주제에 대한 발표와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울란바토르시 정책분석연구원의 대전세종연구원 방문

6월 14일(수) 울란바토르시 정책분석연구원의 닥그와 원장, 보양델게르 부원장, 알기르마 몽골 NGO 대표, 이윤정 미라클 글로벌 대표, 김한덕 교수(몽골 후레대학교 대외협력부처장) 등이 연구원을 방문하여 국제세미나 개최 등 향후 국제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DSI-PSI-KCA 공동 학술세미나

6월 15일(목)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전세종연구원(DSI)은 치안정책연구소(PSI), 한국CPTED학회(KCA)와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방안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와 CPTED 역할'을 주제로 자치경찰제도의 발전과 셉테드 교육(경기대 황희갑 교수), 청소년 비행구역 개선사업(깨안길 프로젝트)(세종경찰청 홍성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수(좌장/치안정책연구소), 강용길(치안정책연구소), 이형복 기획조정실장(대전세종연구원), 이도선(한남대), 임형진(백석대) 님이 대전광역시와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CPO, CPTED담당 공무원, 경찰학 교수 및 연구자, 시민 등과 함께 도시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방안을 모색하였다.

2023 상반기 충청언론학회-대전세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6월 16일(금) 배재대학교 스마트배재관 SPU 101호에서 '충청 지역의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2023 상반기 충청언론학회-대전세종연구원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충남대 차재영 교수의 '충청의 언론-충청의 지역 정체성과 언론의 역사' 기조강연에 이어 충청지역 역대 국회의원선거 슬로건으로 본 정치 커뮤니케이션 특성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있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통한 지역 정체성 탐구를 꾀한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중도일보와 대전MBC, TJB문화재단이 후원하였다.

"NO EXIT" 마약 예방 캠페인 참여

대전세종연구원은 6월 19일(월) 'NO EXIT 마약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안전보건책임자인 김영진 원장을 비롯해 관리감독자인 안용준 세종연구실장, 박정규 사무처장, 강현용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피켓을 들고 SNS 릴레이 활동을 펼쳤으며 연구원 내부 구성원들은 카카오톡 프로필 설정, 또는 인증사진 촬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공동세미나 개최

대전세종연구원은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와 6월 21일(수) 연구원 2층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에서 "대전 · 세종 · 충청 초광역권 발전방안-경제산업분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공동개최하였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의 '초광역 경제권 실현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역할과 추진 전략'과 안용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의 '초광역협력사업 기반의 초광역권 발전방안 : 산업분야 중심'에 대한 주제발표 후에 광역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대전 미래전략 2050 그랜드플랜 수립을 위한 주거정책 부문 전문가 세미나

6월 27일(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전 미래전략 2050 그랜드 플랜 수립을 위한 주거정책 부문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다. 노후 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재생 사업 연계방안에 대한 박정은(국토연구원)님의 발표와 거주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문화 정책과제에 대한 성은영(건축공간연구원)님의 발표에 이어 전영훈(대전대) 교수와 이영은(LH토지주택연구원)님, 양승희 책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지역혁신중심 고등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콜로키움

7월 17일(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전 지역혁신 연계 대학 혁신방안의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한 지역혁신주심 고등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콜로키움이 있었다. 대전 지역혁신 연계 대학혁신의 전략방향성(황혜란 수석연구위원), 대전 지역대학 교수/학생 창업 지원 플랫폼 기능 강화 전략과제(이원일 한밭대 교수), 대전 지역대학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전략방향과 과제(목원대 이성상 교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1부 세션에 있었고 2부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 대비 인재양성 대응 대전지역대학의 전략방향(김동욱 충남대 교수),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활용-역량개발 시스템 구축(최창범 한밭대 교수), 대학교육모델 혁신과 대전 지역대학의 과제(박현민 배재대 교수), 바이오분야 인재양성과 대전지역 대학의 전략과제(현병환 대전대 교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전세종상생포럼 2023년 상반기 정기포럼 개최

7월 20일(목) 대전세종상생포럼, 대전세종연구원 기획조정실&도시정보센터의 주관으로 제4기 대전세종상생포럼 출범식과 2023년 상반기 정기포럼이 개최되었다. 원장 및 대전세종상생포럼 제4기 포럼위원, 상생과제 참여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포럼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4회 대세다담(大世多談) 포럼

8월 1일(화) 대전청사 2층 ICT커뮤니티홀에서 제4회 대세다담(大世多談) 포럼이 개최되었다. 대세다담 포럼은 대전과 세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도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개최해온 정책개발 행사이다. 이시철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주제강연 '공간 메리토크라시의 부상과 도전'을 발표하였다. 참석자들은 수도권-전국권의 격차로 발생한 공간 메리토크라시의 쟁점을 이해하고 대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대책 토론회

8월 9일(수)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컨퍼런스홀에서 대전세종연구원과 윤창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김진유 교수(경기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10분 발언에 이어 송인암 대전대 교수(좌장), 박용민 (주)재테크부동산중개법인 대표, 박종훈 한밭대 교수, 손해연 대전시 토지정보과장, 이영은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선 종합토론이 있었다. 청년층의 피해가 매우 컸던 전세사기의 정책대안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각기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2023년 한국선거학회 · 한국지방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대전세종연구원은 8월 17일(목)부터 18일(금)까지 배재대에서 '정치양극화 시대의 지방정치와 선거제도'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배재대 한국미래의정연구소와 국회미래연구원,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팀,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선거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가 주관했다. 4개 섹션, 6개 패널로 구성하여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공론조사 평가, 지역발전과 지방정치의 과제,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선거와 공직선거법, 정치양극화와 선거정치, 선거정치와 지방정치 연구의 역사 · 현황 · 과제, 팬덤정치 시대의 한국정당을 다루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된 행사였다.

2023 대전경제 미래전략 포럼

연구원은 8월 18일(금)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및 대전상공회의소, 대전광역시와 '2023 대전경제 미래전략 포럼'을 공동개최하였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민선8기 출범 후 현재까지 대전경제와 정책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지역 산업 현황에 따른 맞춤형 미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1년간의 대전 경제 현황 및 향후 전망', '대전광역시 산업 현황 및 정책방향', '대전의 지역성장잠재력 분석과 산업발전 전략' 3개 주제에 대한 발표 후 종합 토론을 진행하였다.

원자력 안전교부세 챌린지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은 8월 22일(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챌린지에 참여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원자로 '하나로'가 위치해 있지만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전 보유 지역의 방사능 유출 위험에 다른 재난 방재와 안전 관리 등 주민보호사업 활용에 사용되는 원자력안전교부세에 대하여 김영진 원장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이 지난 7월 목표 조기달성에 성공하였으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NEWS

편 집 위 원

위원장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위 원 박명신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교수)
서기자 (목원대학교 창의교양학부 교수)
최도영 (대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범규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병선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은재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성은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남영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변성수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정광진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대전세종포럼

대전세종포럼 통권 제8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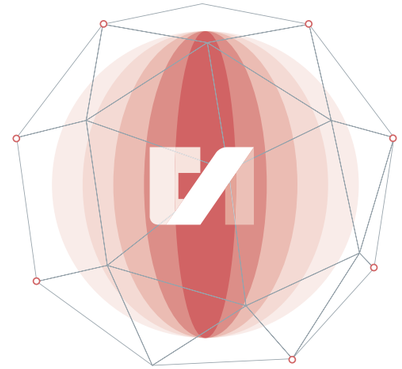
발행일 2023년 9월 1일
발행인 김영진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등록번호 대전유성, 바00013
주소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지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08
제작 ㈜봄인터랙티브미디어 (Tel.042-633-7800)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연구과제 제안 안내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시 각계각층의
연구요구를 수용하고 활발한 지적교류와 정책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연구과제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대전세종연구원 홈페이지(www.dsi.re.kr) 시민의소리(연구제안)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DAEJEON
SEJONG
FORUM

www.dsi.re.kr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지동) Tel. 042. 530. 3500 Fax. 042. 530. 3508